

목 차

소방행정분야

1. 특별휴가(부모휴가) 관리 소홀	03
2. 소방공무원 비상연락체계 유지 소홀	04
3.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점검 소홀	05
4.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업무처리 소홀	06
5.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재검토	07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평정(전문능력) 업무처리 소홀	08
7. 교육훈련성적 평정(전문교육) 업무처리 소홀	09
8. 소방공무원증 관리 소홀	10
9. 소방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점검 소홀 (2)	11
10. 징계의결요구 사항 업무처리 부적정	12
11. 외부강의 신고 기한 미준수	13
12.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수립 등 업무 소홀	14
13. 체력검정 평정 부여 업무 부적정	15
14. 외근부서 근무일지 작성 운영 부적정	16
15. 공문서 정보공개 분류기준 적용 부적정	17
16.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소홀	18
17. 직속기관 소방서 하부조직 사무분장 일부 누락	19
18. 도서지역 119안전센터·지역대 복무·인사 운영 방안 강구	20
19. 119구조대 출동여건 및 청사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강구	21
20. 소방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관리 소홀	22

21.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계획 수립 업무 소홀	23
22. 행정용 PC(저장매체) 불용처리 부적정	24
2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대책 추진 소홀	25
24.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업무추진 소홀	26
25. 연가 사용 관리감독 소홀	27
26. 비밀기록물 이관 등 업무처리 소홀	28
27.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업무처리 소홀	29
28.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 소홀	30
29. 공문서(생산문서) 사무전결 처리 부적정	31
30. 소방관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강구	32
31.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대장 기록 미삭제	33
32. 소방청사 CCTV 설치 관리·운영 소홀	34
33. 보직변경자 실무적응 교육훈련 소홀	35
34.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 관리 소홀	36
35. 소방공무원증 발급 및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소홀	37
36. 강사료 원천징수(소득세) 처리 소홀	38
37.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수당(공동근무) 지급 부적정	39
38. 소방공무원 보직관리 업무 부적정	40
39. 상훈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41
40.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 업무처리 소홀	42
4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연가 등) 업무 소홀	43
42. 휴가(병가) 관련 업무처리(진단서 제출 확인) 소홀	44

예산회계분야

1. 공사계약(분할계약) 부적정	47
2. 공사 계약 원가계산서 검토 소홀	48
3.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49
4.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및 소방장비 관리 소홀	50
5. 공공예금 계좌관리 및 이자 세외수입 처리 소홀	51
6. 내용연수 경과 차량 및 매각 차량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52
7. 공사계약(원가계산, 입찰 참가자격) 부적정	53
8. 의용소방대 피복 구매 업무 부적정	54
9. 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	55
10. 국내여비 및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지급 부적정	56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지급 부적정	57
12. 공공운영비(전화요금) 집행 부적정	59
13.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처리 소홀	60
14.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61
15. 예산편성목(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62
16. 수입(세외수입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63
17.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 검토 소홀	64
18. 지하 전기실 수전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 권고	65
19.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소홀	66
20.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구 업무 소홀	67
21. 출장여비 및 수당 지급 부적정	68
22.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69
23. 계약 체결업무 등 부적정	70

24. 물품 관리 부적정	71
25.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72
26. 계약 체결업무 등 부적정	73
2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74
28. 예산집행 부적정	75
29. 소방청사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76
30. 공사계약 원가계산 부적정	77
31. 물품 관리 등 업무 소홀	78
32. 소방차량 무상보증 수리 이행 부적정	79
33.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소홀	80
34.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업무 소홀	81
35.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소홀 (2)	82

예 방 민 원 분 야

1. 위험물의 저장 제한 의무 위반(무허가 위험물 저장)	85
2. 자체점검 조치명령 대상 시정 여부 확인업무 소홀	86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87
4.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설치 설계도서 미첨부	88
5. 소방시설공사 시공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제출	89
6.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90
7.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2)	91
8.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92
9. 위험물제조소등 품명·수량 변경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93
10. 민원업무(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처리절차 부적정	94

1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위반	95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부적정	96
13. 소방청사건물 작동기능 및 외관점검 태만	97
14.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통보현황 관리 소홀	98
1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99
16. 소방시설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100
17.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허가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101
18.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자 수시교육 이수확인 부적정	102
19.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2)	103
20.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105
2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등 의무 위반	106
22.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 소홀	107
23. 위험물 저장의 제한 의무 위반(무허가 위험물 저장)	108
2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유지관리 소홀	109
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110
2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2)	111
27. 소방시설공사 착공·완공 업무시 개정 법령 검토 부적정	112
28. 민원처리 세외수입 납입업무 소홀	113
29.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114
30.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 소홀 (2)	115
3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 허가 위반(상치장소 변경)	116
32.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차수 산정 부적정	117
33. 자체점검 조치명령 발부 업무 부적정	119
34.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업무 부적정	120
35.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설계기준 검토 소홀	121

36.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 지침 확행보	122
37.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업무 소홀	123
38.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치명령 부적정	124
39.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송달업무 부적정	125
40. 건축허가 등 동의 처리업무 부적정	127
41.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128
42. 소방감리원 세부적인 배치기준 위반	129
43. 민원정보시스템 방염성능검사관리 현행화 미이행	130
44. 위험물제조소 등 등록면허세 관련업무 소홀	131
45. 소방안전대책 관련 기부물품 처리 부적정	132
4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행정처분 소홀	133

대응구조구급분야

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 절차 부적정	137
2. 소방응원협정 대상 정비·점검 등 업무 추진 소홀	138
3. 화재증거물 수집 관리 절차 준수 소홀(관계인 동의 누락)	139
4.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	140
5. 공기호흡기 적재관리 이행 소홀 및 화재조사 근무체계 미확보	141
6.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평가 미실시자 심의 소홀	142
7.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세트) 지급 부적정	143
8. 신규 구급대원 교육담당관 자격 부적정	144
9. 소방전술훈련평가 제외자 통보 부적정	145
10.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절차 미준수	146
11.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147

12.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펌불런스) 운영 부적정	148
13. 본서 심신안정실 관리 소홀	149
14.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업무 소홀	150
15.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가선발 미흡	151
16. 풍수해 대비 비상상황근무 소집인원 산정 미흡	152
17. 구급장비 불용 및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미흡	153
18. 출동차량 안전운행 의무 소홀	154
19.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 평정점 부여 부적정	155
20.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156
21. 소방용수시설조사 결과 입력 소홀	157
22. 구급활동상황 기록관리 유지 소홀	158
23. 119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위생관리 소홀	159
24. 선착대장 등 화재출동 초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준수 미흡	160
25. 펌불런스 구급자격자 배치 부적정	161
26.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소홀	162
27.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참석기준 미달자 해임 미실시	163
28.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적정 사용	164
29. 잠수장비 정밀점검 미실시	165
3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미준수	166
31. 소방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167
32.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168
33. 구급활동 중 활력징후 측정 소홀	169
34. 퇴직자 개인안전장비 등 관리 소홀	170
35. 소방용수시설 1인 1담당제 추진 소홀	171
36. 개인보호장비 기록 및 재고 관리 소홀	172
37.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고장 소방용수 시설) 소홀	173

특정감사분야

1. 화재안전정보조사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177
2.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관리 및 유예 업무처리 소홀	178
3. 소방건축민원 행정업무처리 개선 방안 마련	179
4. 국내여비 지급업무 절차 부적정	180
5. 현업부서 수당 지급 업무처리 소홀	181
6. 119구조대 장비관리 운영 부적정	182
7. 인사기록카드 입력사항 누락 등 관리 소홀	183
8. 징계기록 말소 업무처리 부적정	184
9. 공인 사전날인 사용 부적정	185
10. 소방공무원 복제착용에 따른 관리 소홀	186

I. 분야별 감사 지적 사례 요약

소방행정분야 감사 지적사례 요약

1	복 무	특별휴가(부모휴가) 관리 소홀 ▷ 부모 휴가 1일 초과 사용에 대한 사전확인 등	p3
2	점 검	소방공무원 비상 연락 체계 소홀 ▷ 비상 연락망 점검계획 문서 미수립, 미응답 직원 관리 소홀	p4
3	복 무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점검 소홀 ▷ 휴직 실태점검 결과보고 반기 1회, 분기 6회 미실시	p5
4	징 계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업무처리 소홀 ▷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처리 누락 3건 및 지연 처리 3건 등	p6
5	징 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재검토 ▷ 성비위 관련 징계위원회 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위원 위촉	p7
6	평 정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정(전문능력) 업무처리 소홀 ▷ 특수 운항 자격증 취득자가 해당부서 미배치임에도 점수 부여	p8
7	평 정	교육훈련성적 평정(전문교육) 업무처리 소홀 ▷ 동일·유사 교육 2개 이상 수료 시 유리한 과정 1개만 평정	p9
8	복 무	소방공무원증 관리 소홀 ▷ 공무원증 관리 실태점검(분기별 1회 이상) 미실시	p10
9	복 무	소방공무원 휴직자 복무관리 점검 소홀 (2) ▷ 질병·육아휴직자에 대한 분기별 복무 점검 미실시	p11
10	징 계	징계 의결 요구 사항 업무처리 부적정 ▷ 부득이한 사유 없이 징계 의결 요구기한(30일) 위반	p12
11	신 고	외부강의 신고 기한 미준수 ▷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	p13
12	보 안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수립 등 업무 소홀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계획 미수립	p14
13	평 정	체력검정 평정 부여 업무 부적정 ▷ 승진자에 대한 체력검정 평점 점수를 승진 전 계급으로 평정	p15
14	근 무	외근부서 근무일지 작성 운영 부적정 ▷ 외근 부서 감독자를 소내근무자로 표기	p16
15	보 안	공문서 정보공개 분류기준 적용 부적정 ▷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대국민 공개로 분류	p17
16	보 안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소홀 ▷ 1년간 개인정보보호의 날 미운영	p18

17	사 무	직속기관 소방서 하부조직 사무분장 일부 누락 ▷ 소방서 하부조직 사무에 대하여 분장 소홀	p19
18	복 무 인 사	도서지역 119안전센터·지역대 복무·인사 운영 방안 강구 ▷ 도서지역 인사운영 자체 방안 마련·시행 미흡	p20
19	근 무	119구조대 출동여건 및 청사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강구 ▷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전문기관 측정 등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미흡	p21
20	복 무	소방공무원 장기재직 휴가 관리 소홀 ▷ 장기재직 휴가일수 적정 사용 관리 및 결과 공문확인 등	p22
21	당 직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계획 수립 업무 소홀 ▷ 당직 및 비상업무 관련 부책, 비품 및 소집계획 미흡	p23
22	보 안	행정용 PC(저장매체) 불용처리 부적정 ▷ 행정용 PC(저장매체) 불용 처리 시 실제 처리결과 확인 소홀	p24
23	보 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대책 추진 소홀 ▷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자체 점검계획 미수립·시행	p25
24	안 전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업무추진 소홀 ▷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 관리기준 운영 자체 계획 미수립	p26
25	복 무	연가 사용 관리 감독 소홀 ▷ 사용 가능 연가일수에서 미공제 후 연가보상비 지급 또는 연가 저축 등	p27
26	보 안	비밀기록물 이관 등 업무처리 소홀 ▷ 보호기간이 지난 비밀문서의 이관, 재분류, 파기 등	p28
27	보 안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업무처리 소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의 채용서류	p29
28	안 전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 소홀 ▷ 교통법규 위반 사례 증가에 따른 저감 대책 등	p30
29	사 무	공문서(생산문서) 사무 전결 처리 부적정 ▷ 규정에 없는 1인 결재 또는 1인 결재 후 재기안	p31
30	보 안	소방관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강구 ▷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 운영 시 책임자 지정 및 대외유출주의 표기	p32
31	대 장 관 리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 대장 기록 미삭제 ▷ 주의, 경고에 대한 관련 대장 기록·삭제 등의 처리 미흡	p33
32	보 안	소방청사 CCTV 설치 관리·운영 소홀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정부) 미지정 및 열람 대장 관리	p34

33	교 육	보직변경자 실무적응 교육훈련 소홀 ▷ 신규채용자 및 인사발령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 훈련 미실시	p35
34	복 무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 관리 소홀 ▷ 가족돌봄휴가 3일을 초과하여 총 4일의 유급 휴가 사용	p36
35	복 무	소방공무원증 발급 및 분실신고·재발급 신청 소홀 ▷ 승진자 미발급, 병역휴직자 미회수, 분실자 미신고 및 재발급 미신청	p37
36	예 산	강사로 원천징수(소득세) 처리 소홀 ▷ 폭력예방교육 등 강사로 지급 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강사로 지급	p38
37	수 당	육아시간 사용자에게 대한 수당(공동근무) 지급 부적정 ▷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동근무 미 실시자에 대해 수당 지급	p39
38	인 사	소방공무원 보직관리 업무 부적정 ▷ 구조분야로 경채 임용된 소방공무원의 보직 관리 미흡	p40
39	상 훈	상훈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 소방행정업무 유공자 자체표창 업무추진 시 경력 미달자 포함	p41
40	복 지	공무상 요양 승인 관련 업무처리 소홀 ▷ 동향보고 등 각종 서류 미제출, 경위 조사 미실시	p42
41	복 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연가 등) 업무 소홀 ▷ 연가를 모두 사용한자에 대한 연가 허가, 병무청 통보기한 지연	p43
42	복 무	휴가(병가) 관련 업무처리(진단서 제출 확인) 소홀 ▷ 병가 사용자(7일 연속, 연간 6일 초과)에 대한 진단서 미제출	p44

예산회계분야 감사 지적사례 요약

1	공사 계약	공사계약(분할계약) 부적정 ▷ 통합발주 노력 소홀	p47
2	원가 계산	공사 계약 원가계산서 검토 소홀 ▷ 공사 계약 시 원가계산서 검토 소홀	p48
3	공사 발주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p49
4	시스템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및 소방장비 관리 소홀 ▷ 종류가 다른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	p50
5	세입 수입	공공예금 계좌관리 및 이자 세외수입 처리 소홀 ▷ 소방관서 계좌 잔액 발생, 포인트·마일리지 등 세입조치 미실시	p51
6	차량 매각	내용연수 경과 차량 및 매각 차량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 내용 연수가 경과된 차량의 성능평가 미실시	p52
7	공사 계약	공사계약(원가계산, 입찰 참가자격) 부적정 ▷ 원가계산 시 보험료율을 법령보다 높게 책정, 공사 참가자격 부적정 공고	p53
8	피복 구매	의용소방대 피복 구매 업무 부적정 ▷ 계약심사 미실시	p54
9	하자 검사	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 ▷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2회 정기하자검사, 최종검사 미실시	p55
10	국내 여비	국내여비 및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지급 부적정 ▷ 공사감독관 현장체제비 5일 초과 일수에 대한 과지급	p56
11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지급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사후 정산 미실시	p57
12	공공 운영비	공공운영비(전화요금) 집행 부적정 ▷ 미사용 전화회선 사용요금 집행	p59
13	공사	석면건축물 관리 업무처리 소홀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6개월마다)에 따른 조치 미실시	p60
14	수당 지급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 특별휴가 초과 사용에 따른 부당 지급된 수당 회수	p61
15	행사 운영비	예산편성목(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행사운영비로 기념품 등을 구매	p62
16	세외 수입	수입(세외수입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 당해연도 예산에 반납 처리해야 할 예산을 세입 조치	p63

17	수 의 계 약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 검토 소홀 ▷ 견적금액에 대한 거래실례가격 등 비교 검토 과정 없이 계약 체결	p64
18	노 후 설 비	지하 전기설 수전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 권고 ▷ 전기설비 안전관리 소홀	p65
19	공 사 계 약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소홀 ▷ 단일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분리하여 발주	p66
20	계 약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구 업무 소홀 ▷ 계약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 미징구	p67
21	출 장 여 비	출장여비 및 수당 지급 부적정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 미실시	p68
22	행 사 운 영 비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 행사운영을 위한 물품을 행사와 관련 없는 대상에게 배부	p69
23	계 약	계약 체결업무 등 부적정 ▷ 대가 지급시 보험료 등 납입사실 증명 미확인	p70
24	물 품	물품관리 부적정 ▷ 물품관리 시스템 미등재	p71
25	지 출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자체 구매카드 미사용하여 대금 지급	p72
26	계 약	계약 체결업무 등 부적정 ▷ 비교검토 없이 계약업체의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 체결	p73
27	지 출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축의·부의금 등 현금으로 집행 시 증빙서류 미첨부	p74
28	예 산	예산집행 부적정 ▷ 예산을 편성대로 집행하지 않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p75
29	공 사	소방청사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하자검사 대상 여부를 미검토 후 보수공사를 실시	p76
30	계 약	공사 계약 원가계산 부적정 ▷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는 등 견적서 원가계산 검토	p77
31	물 품	물품관리 등 업무 소홀 ▷ 자산취득성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미등재	p78
32	차 량	소방차량 무상보증 수리 이행 부적정 ▷ 무상 보증기간 내 유상 수리(수리비 지출)	p79
33	공 유 재 산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소홀 ▷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등록 미실시	p80
34	계 약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업무 소홀 ▷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p81
35	계 약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소홀 (2) ▷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p82

예방민원분야 감사 지적사례 요약

1	위험물	위험물의 저장 제한 의무 위반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p85
2	자체점검	자체점검 조치명령 대상 시정 여부 확인 업무 소홀 ▷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기간 초과	p86
3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기간(10일) 초과	p87
4	다중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 설계도서 미첨부 ▷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도 미첨부	p88
5	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시공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p89
6	완비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 화재안전기준을 누락하여 감지기 누락	p90
7	완비명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2) ▷ 설치신고와 시공이 다른 경우 설계도서 재제출	p91
8	공사업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고 거짓보고서 제출	p92
9	위험물	위험물제조소등 품명·수량 변경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기한(1일) 초과	p93
10	민원접수	민원업무 처리 절차 부적정 ▷ 민원서류 선검토 후 접수	p94
11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위반 ▷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 기간(30일) 초과	p95
12	자체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부적정 ▷ 법령에 근거없이 자체점검 유예	p96
13	자체점검	소방청사건물 작동기능 및 외관점검 태만 ▷ 119안전센터 작동기능점검 등 태만	p97
14	다중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통보현황 관리 소홀 ▷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구청 통보사항 대장 작성 미실시	p98
15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 소화용수 설비 제수변 누수	p99
16	공사업	소방시설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 책임시공기술자 공사 현장 미배치	p100

17	위험물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허가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p101
18	다 중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자 수시교육 이수확인 부적정 ▷ 위반행위 적발 대상 소방안전교육 기한 초과(적발후 3개월)	p102
19	공사업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시공하고 거짓보고서 제출	p103
20	안 전 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 선임기간 초과(해임후 30일 이내)	p105
21	다 중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등 의무 위반 ▷ 비상구 전실내 물건 적치	p106
22	내 진 기 준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 소홀 ▷ 소방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 가요성 이음장치 미설계	p107
23	위험물	위험물 저장의 제한 의무 위반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	p108
24	위 반 용 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유지관리 소홀 ▷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분실, 오기 및 훼손 발생 보고 미 실시	p109
25	안 전 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 해임후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미 실시	p110
26	안 전 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2) ▷ 해임후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미 실시	p111
27	공사업	소방시설공사 착공·완공 업무시 개정 법령 검토 부적정 ▷ 개정된 법정 서식 미사용	p112
28	자 체 점 검	민원처리 세외수입 납입업무 소홀 ▷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익일이내 시 금고 납입 미 실시	p113
29	국 민 신문고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 임의로 현장을 확인하고 유선 연락하여 민원종결	p114
30	내 진 기 준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 소홀 ▷ 소방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 가요성 이음장치 미설계	p115
31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 허가 위반 ▷ 상치장소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p116
32	행 정 처 분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차수 산정 부적정 ▷ 행정처분 차수 산출 부적정	p117

33	자 체 점 검	자체점검 조치명령 발부 업무 부적정 ▷ 업체에서 제출한 문서를 스캔하여 조치명령서로 발송	p119
34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업무 부적정 ▷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보관 요구하지 않고 필증교부	p120
35	소 방 협 의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설계기준 검토 소홀 ▷ 입체형 유도등 미반영	p121
36	자 체 점 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 지침 확행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업무처리지침	p122
37	위험물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업무 소홀 ▷ 위험물 용도폐지 현장확인 미실시	p123
38	조 치 명 령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치명령 부적정 ▷ 근거없이 조치명령 재발부	p124
39	조 치 명 령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송달업무 부적정 ▷ 조치명령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치명령을 발부	p125
40	위 반 용 지	건축허가 등 동의 처리업무 부적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을 동의 대상이 아님으로 통보	p127
41	임 시 소 방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p128
42	감리원 배 치	소방감리원 세부적인 배치기준 위반 ▷ 소방감리 공사현장 미배치	p129
43	시스템	민원정보시스템 방염성능검사관리 현행화 미이행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을 소홀	p130
44	위험물	위험물제조소 등 등록면허세 관련업무 소홀 ▷ 등록면허세가 미납	p131
45	기 부 물 품	소방안전대책 관련 기부물품 처리 부적정 ▷ 기부 물품 처리절차 미 실시	p132
46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행정처분 소홀 ▷ 의견제출 기회 부여 없이 행정처분 실시	p133

대응구조구급분야 감사 지적사례 요약

1	과태료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 절차 부적정 ▷ 징수유예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여 결정	p137
2	응원협정	소방응원협정 대상 정비점검 등 업무 추진 소홀 ▷ 정기 및 수시 소방응원협정 정비계획을 미수립	p138
3	화재조사	화재증거물 수집 관리 절차 준수 소홀 ▷ 감정 후 증거물 처리 시 질문기록서 상 관계인의 서명 누락	p139
4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 ▷ 교육 여비(소집수당) 신청서 미제출	p140
5	안전장비	공기호흡기 적재관리 이행 소홀 및 화재조사 근무체계 미확보 ▷ 개인안전장비 출동 차량 비치 부적정 등 교대점검 이행	p141
6	체력검정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평가 미실시자 심의 소홀 ▷ 체력검정 미실시자가 제출한 서류(진단서) 미확인	p142
7	소방장비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세트) 지급 부적정 ▷ 공기호흡기 세트 1인당 1점을 미지급	p143
8	구급교육	신규 구급대원 교육담당관 자격 부적정 ▷ 5년 미만의 1급 응급구조사 16명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	p144
9	전술훈련	소방전술훈련평가 제외자 통보 부적정 ▷ 휴직자에 대한 평가점수 부적정	p145
10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절차 미준수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미통지	p146
11	소방수용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 미입력	p147
12	구급장비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펌블런스) 운영 부적정 ▷ 구급 자격자를 배치하지 않고 펌블런스를 운영	p148
13	보건안전	본서 심신안정실 관리 소홀 ▷ 환기시설의 부재 및 총 4점의 피톤치드발생기가 고장 방치	p149
14	과태료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업무 소홀 ▷ 과태료 부과사항 등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미입력	p150
15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가선발 미흡 ▷ 지급 정지 사유 발생 후 추가로 장학생을 미선발	p151
16	비상근무	풍수해 대비 비상상황근무 소집인원 산정 미흡 ▷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정하지 않아 소집 인원을 부족 구성	p152
17	소방장비	구급장비 불용 및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미흡 ▷ 시스템 상의 현황이 상이하며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의 미불용	p153
18	소방차량	출동차량 안전운행 의무 소홀 ▷ 귀소 및 출장 중 제한 속도 또는 지정 차로 준수를 위반	p154
19	전술평가	소방공무원 전술평가 평정점 부여 부적정 ▷ 전술훈련평가 동점자 평정 처리기준 미준수	p155

20	자 조 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 특정소방대상물 누락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 미 실시	p156
21	소 방 수 용	소방용수시설조사 결과 입력 소홀 ▷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 후 조사결과 미 입력	p157
22	구 급	구급활동상황 기록관리 유지 소홀 ▷ 이송거부·거절 확인서 미작성	p158
23	구 조 장 비	119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위생관리 소홀 ▷ 월 1회 이상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 위생 관리 미 실시	p159
24	작 전 절 차	선착대장 등 화재출동 초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준수 미흡 ▷ 선착대장 등 화재출동 초기 무전 이행 소홀	p160
25	구 급 자 격	펌블런스 구급자격자 배치 부적정 ▷ 구급자격자 배치하지 않고 펌블런스 운영	p161
26	보 호 장 비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소홀 ▷ 자체점검 조치명령 이행여부 확인기간 초과	p162
27	의 용 소 방 대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참석기준 미달자 해임 미 실시 ▷ 전문교육 연 12시간 미이수로 해임사유에 해당	p163
28	과 태 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적정 사용 ▷ 개정된 법령의 상향된 과태료 금액 미 적용	p164
29	소 방 장 비	잠수장비 정밀점검 미 실시 ▷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외부 전문 업체에 정밀점검 미 실시	p165
30	화 재 조 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미 준수 ▷ 화재조사 결과보고 기한 15일을 초과하여 연장보고	p166
31	과 태 료	소방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 과태료 부과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서면으로 진행 않음	p167
32	자 조 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지연 실시	p168
33	구 급	구급활동 중 활력징후 측정 소홀 ▷ 현장 도착하여 최초 1회, 병원 도착 직전 마지막 1회 미 실시	p169
34	안 전 장 비	퇴직자 개인안전장비 등 관리 소홀 ▷ 개인보호장비 등의 회수 및 불용처리 미 실시	p170
35	소 방 수 용	소방용수시설 1인 1담당제 추진 소홀 ▷ 2018. 6. 1.부터 시행중인 1인 1담당제 미 실시	p171
36	보 호 장 비	개인보호장비 기록 및 재고 관리 소홀 ▷ 문서상 재고 수량과 실제 보유 수량 불일치로 관리	p172
37	소 방 수 용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고장 소방용수 시설) 소홀 ▷ 고장 소방용수시설의 수리 공사를 6개월 이상 지연	p173

특정감사분야 감사 지적사례 요약

1	정 보 사	화재안전정보조사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 관계인 지도사항 기재 및 점검결과 이상유무 미기록	p177
2	자 체 점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관리 및 유예 업무처리 소홀 ▷ 유예기간 종료 후 사용 재개시 7일 이내에 소방관서 미통보	p178
3	건 축	소방건축민원 행정업무처리 개선 방안 마련 ▷ 문서고 기록물 보관 공간 협소	p179
4	여 비	국내여비 지급업무 절차 부적정 ▷ 절차없이 여비청구서를 전자메일 또는 문서수발로 전달	p180
5	출 동 가 산 금	현업부서 수당 지급 업무처리 소홀 ▷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출동건에 대하여 과지급	p181
6	소 방 장 비	119구조대 장비관리 운영 부적정 ▷ 특수보호복을 제외한 장비를 개방 상태로 장기간 보관	p182
7	인 사	인사기록카드 입력사항 누락 등 관리 소홀 ▷ 신규임용자 등 학력 및 전력조회 등을 미입력	p183
8	징 계	징계기록 말소 업무처리 부적정 ▷ 말소 결재 및 말소 사실 통보 등을 실시하지 않고 기록말소	p184
9	공 인 날 인	공인 사전날인 사용 부적정 ▷ 문서상 사용기간을 미지정하여 공인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	p185
10	복 제	소방공무원 복제착용에 따른 관리 소홀 ▷ 복제규정에 맞지 않는 점퍼류 착용	p186

일러두기

본 사례집은 인천소방본부 감사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감사를 주관하고 그 결과로서 처분한 요구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 중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의 법령 등은 개정 전 시행 당시의 법령으로 종전의 규정으로 현재와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Ⅱ. 소방행정분야 감사 사례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1 특별휴가(부모 휴가)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시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으로 감사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소방서 소속 직원(소방○ ○●○○)의 특별휴가 사용(부모 휴가 1일 초과 사용)에 대한 사전확인 등 휴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9항에 따라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소방서 사무 전결 처리 규칙(준칙안)』은 휴가 업무에 관한 사항 등 직원 복무관리는 소방행정과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 관리 주관부서로서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휴가 일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2 소방공무원 비상 연락체계 유지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비상 연락망 점검계획 문서를 수립하지 않고 점검한 사실이 있었으며, 점검계획 수립 시 점검 일자를 다수가 열람할 수 없도록 열람범위를 제한적으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비상 연락망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비상소집 자동 전파 장치(크로스) 자동응답에 무 응답한 직원에게 개별연락 하여 적극적인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비상 연락 체계 유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5조(비상 연락체계의 유지) 제1항 및 제27조(비상 연락망의 정비·보완)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매월 1회 이상 비상 연락망 등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동 규칙 제29조(감독)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과 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휴직자에 대한 복무 관리 점검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 현재까지 소속 휴직자에 대해 반기 보고는 총 1회, 분기 보고는 총 6회 미 실시하는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 실태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 15(휴직자 복무 관리 등)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 9(휴직 실태점검)에 의거 소방공무원 중 휴직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휴직 실태점검¹⁾을 실시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복무상황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분기 점검(연4회) : 질병 휴직, 유학 휴직, 육아휴직, 자기 개발 휴직
반기 점검(연2회) : 연수휴직, 간병 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4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6월 감사 기간에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 대상에 대하여 말소 처리 누락 3건 및 지연 처리 3건 등 말소처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은 징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때와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그리고 동 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서 직위해제 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인사기록 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직위 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소방공무원징계등 기록말소 시행 지침 불문(경고) 처분기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통고를 받은 기관장이 당해 소방공무원에 경고 처분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말소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재검토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을 대비하여 민간위원을 위촉함에 미흡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관(소방서)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의 차순위 계급자가 되며, 공무원위원은 최상위 계급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 ❁ 또한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6항²⁾**에는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 포함되어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 사건이 속한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7. 28.>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정(전문능력)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정(전문능력)시 소방정 운항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 취득자 2명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배치되지 않았음에도 1.5점을 평정하였으며, 자격증 미취득자 1명에 대하여 1.5 점을 평정하는 등 교육훈련성적평정(전문능력)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정 규정 제12조(전문능력평정) 제4항에 의하면 소방헬기 및 소방정 운항을 위하여 해당 부서에서 배치된 자가 다음 각호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1.5 점으로 평정한다. 다만, 타 부서 배치 또는 해당 자격증을 채용요건으로 경력경쟁 채용된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 교육훈련성적 평정(전문교육)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2019년 상·하반기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분야(사이버교육) 평정 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교육일 경우에만 평가 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하여 평정하여야 함에도 법정 의무교육(사이버교육 등) 이수 부분에 대하여 동일(유사) 교육으로 간주하여 총 8건(상반기 6건, 하반기 2건)에 대하여 교육훈련 평정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하는 등 평정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이 이수한 전문교육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교육훈련 성적평정의 기준) 및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평정 규정 제11조(전문교육 평정)과 「소방본부 근무성적평정 업무지침」에 의거 해당 계급에서 동일하거나 내용이 유사한 전문교육 과정(사이버교육)을 2개 이상 수료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유리한 과정 1개에 대해서만 평정해야 합니다.
- ❁ 2018.09.13.자 이전에 이수한 사이버교육 과정의 평정점은 최대 0.5점(과정당 0.25점)을 초과할 수 없고 늘어나는 0.5 점에 대해서는 2018.09.13. 이후 이수한 사이버교육부터 가산되어 적용되며 평정점은 최대 1.0 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8 소방공무원증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 소속 직원에 대한 공무원증 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원 275명 중 2명(소방위 ○○○, 소방교 ○○○)의 분실자가 발생하는 등 공무원증 발급 및 실태점검 등 업무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0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및 제62조(공무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제3항에 의거 기관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한 경우 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공무원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속 직원의 공무원증 관리 실태를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합니다.

9 소방공무원 휴직자 복무 관리 점검 소홀 (2)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질병·육아휴직자 ('19년 1분기 : 1명, '19년 3분기 : 1명, '20년 1분기 : 3명, '20년 3분기 : 8명, '21년 1분기 : 3명)에 대하여 매 분기 복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중인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 제57조(휴직자 복무관리)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권자에게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9(휴직 실태점검) 규정에 따라 휴직자의 복무 관리의 실태점검(정기·수시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 또한,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규정에 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는 매 반기별로 하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제2호 및 제4호 및 7호에 따른 휴직³⁾은 매분기 복무상황 보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자기개발휴직

10 징계 의결 요구사항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의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등 범죄처분 결정 결과 통보서에 대한 징계의결 현황을 확인한바, 2021년 ★월 17일에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보서를 접수하고, 30일 이내인 2021년 ◆월 17일까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징계 의결 요구 기한의 말일부터 30일 이내인 2021년 ◎월 17일 까지 징계 의결을 하여야 하지만, 2021년 ●월 19일에 징계 의결을 한 사실은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1조(징계 등 의결 기한)를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0조(징계 등 사건의 통지) 제3항 징계 등 사유를 통지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 ❁ 또한 동법 제11조(징계등 의결 기한) 제1항에 따라서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1 외부강의 신고 기한 미준수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위 ○○○은 2021. 3. 11. 소정의 자문료를 받고 “○○○○○○○○○○”을 위한 자문을 실시 한 후 10일이 지난 2021. 3. 23일에 외부강의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5조,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 제2항⁴⁾에 의하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 강령 규칙 및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한 외부강의 신고 기한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4)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수립 등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는 2021년도 자체 정보통신 보안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통신·전산 보안 교육 및 지도 활동 전개,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보안 등 개인 영상 정보관리 교육, 자체 통신 전산망 보안대책 수립 및 각종 통신 전산망 보안 취약 요인 지속적 발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심사분석을 통하여 통신 보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계획 미수립 등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지침 제7조(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 ①항에서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 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인천광역시 119종합상황실-1594)2020.2.6.)호 「2020년도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사달(통보)에 근거하여 전산·통신 보안업무 관련하여 추진 계획을 수립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3 체력검정 평정 부여 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1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평점 점수를 산출함에 있어 소방위 ○○○, 소방위 ○○○, 소방장 ★★★, 소방교 ▲▲▲의 승진으로 인한 평정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승진 전 계급에 적용되는 2년 6개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로 부적절하게 평정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제11조(체력검정성적의 평정점 부여)에 의하면 제7조의2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현 계급에서 체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자 중 제2호·제3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2년 6월 이내의 체력검정 점수 중 가장 최근의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검정 점수로 하되, 최근 2년 6월 이내의 실적이 없는 경우 체력검정 점수는 임용권자별 가장 최근에 실시(제7조의2에 따라 일부만 실시한 경우 제외)한 계급별 평균점수(연령대별 보정지수 포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체력관리기관의 장은 개인별로 체력검정성적 평정결과를 체력검정성적 평정 카드에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13조에서는 체력검정 결과를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해당연도 교육훈련 성적 평정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외근부서 근무일지 작성 운영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외근 부서 감독자를 당일 센터장(유고시 팀장)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119안전센터의 경우 민원 행정 근무자(구, 소내 근무자)로 표기하였으며, ☆☆119안전센터의 경우 퇴근한 센터장을 야간에도 감독자로 표기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8조(근무일지의 기록·보관) 및 「표준인사관리 시스템(e-사람) 전면 도입에 따른 실무자 교육 계획 알림[시 소방행정과-11073(21.05.26)]호에 따라 소방관서 외근 부서에는 전자적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 근무일지 작성 시에는 규칙 제48조 제4호에 따라 “외근 부서 근무일지는 일일 근무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근무중 발생·처리한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일 근무의 지정에 따른 외근 부서 민원행정⁵⁾근무자(구, 소내 근무자)는 근무에 임할 때 본인의 e-사람⁶⁾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25조(민원행정) 제1항 6. 교양, 지시 그 밖에 행정실에서 행하는 제업무 기록

6) e-사람 : 전자인사관리시스템(표준인사관리시스템), (인사혁신처) 공무원인사기록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의3

15 공문서 정보공개 분류기준 적용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개인정보 일부가 포함된 57건의 문서를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혹은 부분 공개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대국민 공개로 분류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다.
- ❁ 다만 1 ~ 8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2021년 3월 이후 2022년 2월까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의 업무추진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⁷⁾ 및 2021년도 개인정보보호 추진 계획 알림[(시 정보화담당관-3096(2021.2.19.))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 부서(기관)이 「매월 첫 번째 수요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의 날에는 각 부서에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 정보중 사용(이용) 목적이 지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PCFILTER(스캔)⁸⁾ 검사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보호의 날 점검 방법

○ PCFILTER(구,설특홈즈PC스캔)활용하여 검출되는 개인정보 파일 ‘암호화’ 또는 ‘완전삭제’ 【PCFILTER 설치 다운로드 <http://101.0.25.70>】

17 직속기관 소방서 하부조직 사무분장 일부 누락

【지적내용】

☆☆소방서의 각과·단장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4조 (하부조직) 사무에 대하여 누락 됨이 없이 분장하여야 함에도 소방행정과 9개, 예방안전과 12개, 119재난대응과 5개, 현장대응단 7개 항목을 각각 누락 하여 소방서 하부조직 부서별 사무 분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6조(하부조직 등)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4조(하부조직) 제1항 소방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119재난대응과, 현장대응단을 둔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119재난대응과장, 현장대응단장은 각각 소방령으로 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각각의 사무로 소행정과 35개, 예방안전과 26개, 119재난대응과 25개, 현장대응단 20개를 항목을 분장하고 있습니다.

18 도시지역 119안전센터 · 지역대 복무 · 인사 운영 방안 강구

【지적내용】

☆☆소방서 도시 지역 외근 부서의 경우 선박을 통한 원거리 출·퇴근과 일부 열악한 청사 근무환경, 지역대의 3인 근무 등의 애로사항이 있으나, 3당 3비 근무와 상대적으로 업무 하중이 약한 것 등의 이유로 도시 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있는바, 적절한 인사운영을 위해 근무자(희망자)에 대한 복무 사항, 직무 수행 태도 및 관서 전입 사항 등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및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 · 점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조(근무기강의 확립)에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21년도 소방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시달[시 소방감사담당관-944 (2021.01.27.)]호 및 2022년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시달[시 소방감사담당관-783(2022.01.19.)]호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제4조 제2항 임용권자는 승진, 전보, 보직 관리 등 각종 인사운영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며, 개인의 능력 발전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 119구조대 출동여건 및 청사 실내 공기질 개선방안 강구

【지적내용】

☆☆소방서 119구조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청사 내 동선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구조대의 신속한 출동 개선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일부 노력하고 있으나,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전문기관의 측정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보건 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바, 전문기관 등을 통한 검사를 바탕으로 실효성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 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 제3항 소방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 및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 소방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직원 복무 관리를 위해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및 분할 횟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휴가 실시 결과 공문 확인 후 인사관리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특별휴가) 제7항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휴가 일수는 4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해당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전월까지 사용 완료 및 해당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월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인천광역시 총무과-1100(2018.1.16.)호 『2018년 장기 재직 휴가 운영지침』 및 소방행정과-1123(2018.1.18.)호 『2018년 소방본부 장기 재직 휴가 운영지침 알림』과 관련하여 장기 재직 휴가 신청자는 장기 재직 휴가 실시 후 실시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고, 서무담당자는 장기 재직 휴가 일수 및 분할 횟수 범위 내에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인사기록담당자는 장기 재직 휴가 결과를 인사 기록 정보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1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계획 수립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당직상황실 내 당직근무자의 업무를 위한 비상소집 연락부, 관내 유관 기관 비상 연락 체계도 등 당직 및 비상업무 관련 부책, 비품 일부 미비치 하였으며, 비상 소집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시⁹⁾를 대비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 제10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5호 당직 근무자는 소방관서의 장이 당직실 또는 종합상황실에 비치하는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당직실의 비품) 당직실에는 당직근무일지,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규칙, 비상소집 연락부, 비상열쇠 보관함,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그 밖에 당직근무 및 비상소집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제22조(소집계획)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원, 관내 거주자 현황에 따른 차량 소요 대수, 관내 기관의 위치와 도로망 현황, 자체 보유차량 대수,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 관련 업종 종사자, 긴급 소방응원 협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비상 소집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의 연락체계, 응소방법 및 차량동원 등을 포함한 비상 소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유사시(有事時) 급하거나 비상한 일이 일어날 때

22 행정용 PC(저장매체) 불용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행정용 PC(저장매체) 26대 불용 처리 시 분임정보 보안담당관에게 처리계획을 보고(승인) 후 처리 절차에 따라 저장매체를 완전 파괴(소각·파쇄·용해) 또는 전용 소자(消磁) 장비를 이용 저장자료 삭제하여야 함에도 저장장치의 데이터 포맷 및 불용업체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불용물품 인계 후, 소각 및 파쇄 등의 실제 처리결과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¹⁰⁾」 제6조(부정보보안담당관의 운영) 및 제61조(저장매체불용처리) 제1항 각급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 수리·교체·반납·양여·폐기·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 시스템 및 저장 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발 사용자는 분임 정보보안담당관¹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❷ 또한 제4항에서는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정보 시스템 저장매체의 불용 처리¹²⁾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 별표에서는 저장매체 하드디스크의 경우 공개자료는 완전포맷 1회 수행, 민감자료(개인정보 등)는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전용 소자(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완전 포맷 3회 수행 중 택일하고, 비밀자료(대외비 포함)는 완전 파괴(소각·파쇄·용해), 전용 소자(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 중 택일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정보화담당관-11120(2021.6.24), (일부개정7차)

11) 「인천광역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지침 제6조 제3항 각 부서의 장은 발령과 동시에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부서 정보보안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23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대책 추진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범죄예방을 위해“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2020.7.14. 제 · 공포)」 제2조12(정의) 및 4조(계획 수립)에 의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8440(2020.07.23.) 및 소방행정과-13293(2020.07.27.)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추진 철저 알림』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하여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시행 2020.07.14.] 제2조(정의)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4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업무추진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 관리기준 운영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기준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관련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청사 차고문의 고장 및 노후(점검미비)로 인한 소방공무원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소방청사 차고문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위해 마련한 「소방청사 차고문 안전관리 기준 운영 계획 시달(市 현장대응단-8973(2020.07.15.))호」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차고문 주간 점검 및 반기별 전문업체 정밀 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 연가 사용 관리 감독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의 개인별 연가 사용 현황을 확인한바 2021년도 21명에 대하여 연간 사용 가능한 연가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거나 연가를 저축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으며, 2022년도 19명은 연가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공제하지 않는 등 연가 사용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복무 실태의 확인·점검)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 해야 하며 제16조의3(연가의 저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가 사용일수(시간) 미공제 사유

- 2022.1.1. 야간 근무자가 익일 2022.1.2. 조퇴(07:00~09:00) 사용시
 - 2021.1.1. 익일 07:00~09:00로 상신하지 않고
 - 2021.1.2.(비번일) 07:00~09:00로 상신하여 사용시간이 공제되지 않음
- 근무조가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가 상신하는 경우
 - 본인 근무일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용 시간이 공제되지 않음

26 비밀기록물 이관 등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2년 10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III급 비밀문서의 원본(총무** 등) 10건이 보호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록물관리기관(市시민봉사과)으로 이관하지 않았으며, 대외비 경우 원본 2건(청사방호*** 등)은 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지 아니하였고, 사본 2건(북한* ***)은 예고문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는 등 비밀기록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예고문) 및 제27조의 3(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기록물의 관리), 동법 시행령 제68조(비밀기록물의 이관)에 의하면 비밀의 원본은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 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 ❁ 또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분류금지와 대외비) 및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의3(대외비), 인천광역시 대외비 보안관리 제도 개선 계획(市총무과-6131(2017.04.07.)호)에 의하면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고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한 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 다만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개정(2017.02.22.)으로 대외비 경우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규정이 삭제되는 등 대외비 관리 사항이 개정되었고, 이에 개정안 시행 전 기존 대외비 경우는 변경 없이 기존 규칙(비밀과 같은 방법)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27 기간제근로자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구직자의 반환 청구 기간(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고,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함에도 채용서류 24건에 대하여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는 등 채용서류 관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의하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구직자의 반환 청구 기간(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 또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에 의하면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에 따라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28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전 직원에 대하여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및 교통법규 준수 등을 안내한 바 있으나, 2022년도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확인한바 전년대비 총 39건(44.83%)의 증가로 출동 중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지역 교통여건의 변화, 소속 직원의 운전습관 등 위반 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소방차량 출동 중 교통법규 위반 사례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에도 교통법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87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SSG 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5.1 안전운행 일반사항)에 의하면 소방차량 운전 요원은 제반 교통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출동 중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인천광역시 소방행정과-11198(2022.8.25.)호 「소방차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 철저 알림」에서 ‘소방차 안전운행 표준지침’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 3대 과제 준수 철저(교차로 통행시 멈추고 30km 서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공문서(생산문서) 사무 전결 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각 부서에서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사무 전결 규정에서 1인 결재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 이외에 문서는 1인 결재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1인 결재로 처리하거나 1인 결재 후 다시 문서를 재기안 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는 등 사무 전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서를 생산 처리한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서(학교) 사무 전결 처리 준칙(부서,공통) ‘에서 1인 결재할 수 있는 문서는 “①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마. 즉시민원) 중 제 증명 등 발급, ②기타 일반사항 중 아. 각종 간행물의 배부, ③기타 일반사항 중 차. 단순 취합 보고문서”, 3가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문서의 결재) 제1항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소방관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방안 강구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알림(소방행정과-10105(2019.10.22.) 호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 과 안전센터에 지시한 바 있으나, 각 부서에서 업무용 모바일 메신저(카톡방 33개소) 운영시 정보관리 운영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소방현장활동 등 보고문서 작성시 상단에 “대외유출주의” 표기 토록하고 있으나 총 24건 중 5건만 표기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운영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¹³⁾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¹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 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6호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호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31 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 대장 기록 미삭제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행정과에서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 (처분기록의 삭제)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사항을 관련 대장에서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소방위 〇〇〇 등 40명(주의36, 경고4)에 대한 기록 삭제 등의 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8조(처분기록의 삭제) 경고·주의를 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호 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에 등재된 경고·주의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경고·주의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경고·주의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3. 경고·주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32 소방청사 CCTV 설치 관리·운영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119안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지 않은 것과, 2022년 ○○월 ○○일 ○○경찰서 소방청사 CCTV 영상자료 열람 건에 대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개인영상정보 청구서를 받지 않는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제3호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 제7호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청사 주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본서 CCTV(18대) 설치 대비 안내판은 3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각 청사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도록 하여야합니다.

33 보직 변경자 실무적응 교육훈련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9회 246명(21년 146명, 22년 100명)의 인사발령자에 대하여 「보직변경자 실무적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보직변경자 실무적응 교육훈련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6조(직장훈련의 내용)4항.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 교육훈련 및 소방행정과-1089(2022.1.25.)호 「2022년도 소방공무원 직장교육훈련 계획 보고」에 의하면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4 가족돌봄휴가 사용 일수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가족돌봄휴가(특별휴가) 실시 사항을 확인한 바, ☆☆119안전센터 소방장 ㉠㉡㉢는 가족돌봄휴가 3일을 초과하여 총 4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하는 등 개인 복무 관리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항(복무실태의 확인·점검)에 의하면 복무 관리 담당자는 소속공무원의 휴가 등 복무 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특별휴가)제15항에 의하면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5 소방공무원증 발급 및 분실신고 · 재발급 신청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감사일 현재(201㉠. ㉠. ㉠)까지 승진자 미발급 1건, 병역휴직자 미회수 4건, 분실자 미신고 및 재발급 미신청 2건의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증 규정」 제6조(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제3항에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공무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 동 규정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항에 공무원의 승진,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신규임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제2항에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공무원에게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일시 회수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무원이 복직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6 강사료 원천징수(소득세) 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폭력예방통합교육 등 3건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강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❶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따라 강사료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 100분의 60(2018.4~12월 100분의 70)를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라 100분의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계산방법】

- 필요경비 공제금액(b)
 - 강사료(a) - [강사료(a) × 필요경비 공제율(2019년 60%, 2018년 4~12월 70%)]
- 소득세(d) : 필요경비 공제금액(b) × 20%
- 지방소득세(e) : 소득세(d) × 10%
- 원천징수액(c) : 소득세(d) + 지방소득세(e)

37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수당(공동근무)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119안전센터 소방○
 ○●●●에 대하여 육아시간¹⁵⁾사용으로 공동근무를 미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근무수당 42,570원(4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제Ⅵ장(초과근무수당 등)에 근거하여 119안전센터(구조대)에서 근무하는 교대근무자에게 현업공무원 등의 시간외근무수당 산정방법 등에 따라 초과근무수당¹⁶⁾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육아시간 사용 등 특별휴가자 및 휴직·병가 등 사고자에 대한 정확한 수당 지급을 위하여 특별휴가자 및 사고자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15) 육아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⑦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16) 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공동근무시간, 정규외근무시간

38 소방공무원 보직 관리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의 보직관리 실태를 파악한 바, 소방○ ○●○ 등 2명의 경우 구조분야 보직을 부여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함에도, 위 현황과 같이 부적정하게 보직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에 의하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등에는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필수보직기간 및 전보의 제한)에 따르면, 위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은 최초로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직위 또는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9 상훈 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7.●.●부터 2019.□.□□. 현재까지 소방행정업무 유공자 자체표창 업무 추진사항을 검토한 바, 소방○ ●●●●등 2명은 근속 경력 미달자로 추천 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공적심사에서 배제한 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함에도 이들을 포함하여 개최하여 선발하는 등 자체표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소방행정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로 청렴·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한 소방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직원의 사기양양을 하고자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6조(실적평가와 포상)에 근거하여 ☆☆소방서는 2017년부터 분기별로 자랑스러운 소방관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자랑스러운 소방관 자체표창 선발』 분기별 계획에 의하면, 소방행정업무 유공자의 표창 시기는 분기별 1회로 정하고 있으며, 자격요건은 표창추천일 기준 1년 6월 이상 근속 경력이 있고 공·사생활에 있어 타의 귀감이 되는 자 등에 해당되며, 제외대상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훈격 또는 동일 훈격 이상 수상자, 근속경력 미달자,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0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업무 처리에 있어 직원부상에 따른 각종 서류(동향보고, 진단서, 초진 기록지, 근무일지 등)를 제출받아 개인별 관리를 하여 향후 업무에 있어 관련 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사건·사고의 경위를 조사하여 부적절한 신청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과정이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최근 3년간 현장활동에서 부상을 당한 안전 사고 7건 중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사항이 발생한 2018. 3. 1. 화재현장(1건 2명) 및 2018. 9. 20. 다수사상자훈련 현장(1건 1명)에 대하여 부상대원에 적극 안내하여 공상승인 처리 등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조(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및 위험제거를 위한 생활 안전활동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에 의하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연금취급기관장에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7일 이내에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사서를 보내도록 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보내며, 인사혁신처장은 심의회를 거쳐 공무상요양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41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연가 등)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24개월 의무 복무기간)은 201●. ●. ●. 소집되어 201□. □. □까지 복무기간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연가 15일을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201□. □. □까지는 연가를 사용할 수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복무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연가가 아닌 지참·조퇴 및 외출, 결근으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허가한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천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총 2회 3일 [201●. ●. ● ~ 201□. □. □(2일), 201□. □. □(1일)]에 대한 연가를 신청하였고, 이를 결근이 아닌 연가로 허가하였으며, 201●. ●. ● ~ 201□. □. □의 연가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병무청장에게 201□. □. □. 그 사실을 통보하여 통보기한을 40일 지연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휴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병역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제1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는 복무기간이 24개월 이상인 경우 소집된 날부터 1년 이내 15일, 1년 초과 16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무기간별 규정된 연가일수에도 불구하고 복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9조(지참·조퇴 및 결근) 제4항에서는 연가 또는 병가의 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 지참·조퇴 및 외출, 결근을 허가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관련 증빙서류를 덧붙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초과된 일수만큼 연장복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휴가(병가) 관련 업무처리(진단서 제출 확인)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병가를 7일 이상 연속 사용하거나 병가를 연간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대상자는 총 9명으로(2015년도 1명 2건, 2016년도 4명, 9건, 2017년도 4명 11건) 그중에 병가를 7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대상자 6명과 병가사용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대상자 3명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를 소방행정과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방행정과에서는 병가사용자 9명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병가 사용일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 휴가(병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1조(병가)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에 걸려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 제4항에서는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Ⅲ. 예산회계분야 감사 사례

1 공사계약(분할계약)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년 청사 옥상 방수 공사(예산액 33,770천원)를 시행함에 있어, 2019. 5월 본서 옥상 방수공사(20,530천원, 수의계약) 후 2019. 7월 본서 해태관 방수 공사(4,653천원, 수의계약)를 시행하는 등 통합발주 노력을 소홀히 하고, 수의계약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5. 분할계약의 금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17)”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건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2 공사계약 원가계산서 검토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민원인 편의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민원실 이전 공사(예산액 8,272천원)를 계약함에 있어, 원가계산서의 이윤에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뿐만 아니라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여, 294,800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공사 계약 시 원가계산서 검토를 소홀히 하였으며, 제출된 견적가격이 가장 경제적인 가격인지 별도의 비교 검토과정 없이 계약을 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의하면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 제출가능한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이며,
-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이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전문건설공사 발주 시 미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도 운서119안전센터 사무실재배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예정 금액이 1천5백만 원을 초과하여 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 공사업¹⁸⁾ 면허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발주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주자는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동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제1항에 의하여 경미한 공사라 함은 종합공사인 경우 공사예정금액 5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 공사업 면허(등록)를 필요로 하는 공사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5종
전문공사 (1천5백만원 이상)	실내건축,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 해체, 금속구조물, 창호, 난방시공, 시설물유지관리, 승강기설치 등 29종

※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1 참조

18)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4 물품관리시스템 미등록 및 소방장비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 다목적훈련장 영상장치 설치 및 체력단련기구, 2020년 상반기 여직원 대기실 근무환경 공사에 따른 개인사물함 구입 시 물품관리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등을 물품별로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물품관리시스템에 하나의 물품으로 등록하는 등 물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맨홀구조기구 등 3종 4점에 대하여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 사항을 발견한 때 즉시 고장발생보고 후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하나, 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과정 없이 2019년도 하반기 불용물품 처분 시 수리비 과다의 사유로 매각 및 폐기처분을 실시하는 등 소방장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8조(취득)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물품이 필요한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소방장비관리법 제34조(고장 등의 발생 보고 및 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고장 및 사고발생의 보고)에 의하면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불량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제35조(소방장비의 정비)에 의하면 소방장비 고장발생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공예금 계좌관리 및 이자 세외수입 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구매카드를 이용 후 해당계좌에 카드대금을 입금하여 왔으나, 2014.06.10. 예방안전과에서 119소년단 간식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사용 후 e-호조 시스템 입력 시 계좌 오기입으로 ☆☆119안전센터에 입금하여 잔액이 발생하였고, 2016.11.23. 백령안전센터 현관문 수리 명목으로 구매카드 사용 후 신한카드사의 결재 대금 미인출로 ☆☆119안전센터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구매카드 계좌에 잔액이 생겨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하여야 함에도 2020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체하지 않았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 제53조(재정의 통합지출)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규칙 제7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하고 해당 출납원은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해당 출납원은 인천광역시 명의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 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구매카드) 사용요령에서 구매카드는 사용부서 단위별로 1개 계좌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실과에서 세입부서에 직접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내용연수 경과 차량 및 매각 차량 업무처리 절차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구조공작차(98조8018) 등 2대에 대하여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 연장사용을 위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운용한 사실이 있음. 또한, 불용소방차량에 가입하였던 책임보험을 매각일자에 맞추어 해지하고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보험금은 지체 없이 세외수입처리 하여야 함에도 ☆☆ 이론차매각 시 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27조(소방장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 ❁ 동법 시행령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에 의하면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고,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7 공사계약(원가계산, 입찰 참가자격)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의용소방대 차고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시(제 2019-73호)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율 보다 높게 원가계산을 하였으며, 노임 단가에만 가산 적용할 수 있는 도서지역 할증에 대하여 재료비 및 기계경비에도 각각 10%를 계상하는 등 건적서 원가계산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의하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료 등의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절 원가 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에 의하면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가계산 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의용소방대 피복 구매 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년 의용소방대 피복(동기동복 등 4종 821점) 구매 계약(금액 29,435,000원)을 시행함에 있어, 입찰 및 계약 전 의무적 절차인 계약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의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로써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하고 있어 입찰 및 계약 전에 계약심사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및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심사 대상사업)에 의하면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계약 전 의무적 계약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성립)에 따르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습니다.

9 공사 하자검사 실시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119안전센터 체력단련실 바닥교체 공사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정기하자검사 시 이를 누락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구조대 SSD구획 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서는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하자보수관리부에 작성하고 기록·유지하도록 하여 하자점수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2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5조(하자검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 ❁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 전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를 하여 존속기간 종료 이후의 하자발견에 따른 추가 예산 지출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10 국내여비 및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소속 직원의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2만원을 지급하고, 공용차량 사용자에게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았으며, 1일 최대금액 2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등 37명에게 총 406,00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시설부대비(401-03)의 공사감독관 현장체재비 지급에 있어, 6일 이상 현장체재의 경우 1 ~ 5일까지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9안전센터 공사감독관에게 2020. 3. 2. ~ 9. 21.(170일) 현장체재기간 동안 1 ~ 5일을 제외한 나머지 매 일수마다 20,000원을 지급하여 총 825,000원을 과오지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8호)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III. 근무지내 국내출장 시의 여비 2. 여비지급 기준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에 의해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및 환경관리비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안내·주의·경고 표지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1,020,800원을 지급하였으며, 단순 쓰레기 처리용의 마대(쓰레기봉투) 역시 환경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182,460원을 지급하는 등 준공금 지급 시 검사 및 사후 정산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에 의하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7조(사용기준) 및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¹⁹⁾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8호) 제4조(환경관리) 및 제5조(환경오염 방지시설)²⁰⁾**에 의하면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훼손 및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 환경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환경오염 방지시설은 건설공사 작업 중 주변에 입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로서 건설현장에서는 여건에 맞게 적정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 1. 비산먼지 방지시설: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 방진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을 포함한다), 기계식 청소장비 등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2. 소음·진동 방지시설: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3. 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시설 및 탈수건조시설을 포함한다)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4.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처리시설[수질 자동측정시스템(TMS)를 포함한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탐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를 포함한다)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 「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12 공공운영비(전화요금)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예방안전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사업(2018.7. ~ 2019.12.) 추진 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2018년 7월 일반전화 7회선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사업이 종료된 이후 1회선은 민원업무로 해당부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6회선은 사업이 종료되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약 15개월간 불필요한 전화요금을 매월 33,972원씩 납부해 온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의 집행기준에서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3 석면 건축물 관리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하반기 석면건축물 조사를 실시하며 사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후 조사결과를 전자문서로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함에도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기재만 하고 전자문서로 계획 및 결과보고를 하지 않아 석면 건축물 관리 업무처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석면안전관리법 제15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르면 석면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석면건축물 기준) 및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의하면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가족돌봄휴가 및 육아시간 사용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소방○ ●●● 등 2명은 미성년 자녀가 2명으로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일, 4.5일 사용하여 각각 1일, 1.5일을 초과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 ●●●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30분을 초과하여 합계 1시간의 육아시간을 초과사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14항에 의거 공무원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따르면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하고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제5항에 의거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라. 특별휴가 (6) 육아시간에 따르면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5 예산 편성목(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안전문화 교육 행사를 운영하며 한국119소년단 운영물품 지출 등 6건의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운영비로 구매하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별표4 내지 별표6에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2. 일반운영비 2-3. 행사운영비(201-03)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 소요되는 초청장,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등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 공무원에 대한 식비 등에 일반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 ❁ 또한,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동 규정 별표5(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6 수입(세외수입 징수)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 2020년도 당해 발생한 차량 보험환급금 및 국내여비 환수금 등 4건에 대하여 당해 예산에 반납처리 하여야 함에도 세외수입조치를 하였고, 징수금액의 조사 및 결정 과정에서 법인 신용카드 포인트 및 고철 매각대금에 관한 수입 발생사실 근거자료가 부존재 또는 미흡하며, 징수결의서상 징수관의 결정 부재, 징수대장상 납부 의무자를 공단소방서로 지정한 다수의 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기타 법령에서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이자 수입 등 5건에 대하여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고지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회계법 제27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고,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제7조에 따른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에 따라 세입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 원인과 징수 금액을 조사·결정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납입고지를 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징수결정통지)에 따라 수입처리는 징수관의 징수결정을 통하여 징수결의서에 따라 징수부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를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납부의무자”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지방회계법 시행령 19조(납입의 고지 등)에 따라 징수관은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 관계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시 견적가격 검토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소방현장활동 개인안전장비함 구매 교체(72종 77점) 등 4건의 물품구매에 있어 여성기업과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견적금액을 거래실례가격 등 비교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견적서에 대한 별다른 비교 검토과정 없이 수의계약하였으며, 계약담당자로서 기초금액 대비 견적 가격을 절감하지 않고 계약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 제출가능한 수의계약 조건²¹⁾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여성기업, 장애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 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1)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 적합한 기업

18 지하 전기실 수전설비 노후로 인한 교체 권고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1994.12.21. 준공이래 현재까지 지하에 229[kV]인 특별고압 수변전설비를 단 한번의 교체·수리없이 사용하고 있으며, 2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전기설비 법정검사”를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한 정기법정검사(2021.9.16.)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자로부터 “노후된 전기설비는 주기적으로 개·보수하여 사용”할 것을 지적 받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일반적으로 한국전력으로부터 고압의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수용가인 공공청사가 그 구내에 전력을 수전하고 변전하는 설비인 자가용 수변전설비를 설치하고 수용가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수변전설비 이후에는 부하측을 비롯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하도록 전기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❷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에는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❸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는 ②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기술기준과 동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하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시설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외벽 구조보강 및 방수용 충전제 교체(예산액 금105,355천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원계약(☆☆소방서 커튼월 외벽 보수공사) 공사과정에서 발견된 ① 청사 우측면 유리외벽의 처짐에 따른 가로바와 외벽사이 틈새 보수 및 ② 계단실 유리외벽의 수직하중 분산을 위한 세로대 보강의 보수내용을 준공기한 도래에 따른 검토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물량 변경을 통한 변경계약 등을 실시하지 않고 각각 분할 계약하는 등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의 4(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같은 절의 5(분할계약의 금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및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습니다.
- ❁ 하지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징구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119구조대 지하실 누수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을 1일 초과하여 준공계를 접수하였고 준공계 접수 후 3일 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총 4일의 지연일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징구하거나 계약금에서 상계 처리하지 않고 계약금액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지연배상금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률²²⁾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의 1(지연배상금)에 의하면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2) 지연배상금률

① 공사 : 1000분의 0.5

② 물품의 제조·구매 : 1000분의 0.8 다만, 계약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

③ 물품의 수리·가공·대여, 용역, 그 밖의 계약 : 1000분의 1.3

④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1000분의 2.5

21 출장여비 및 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의 출장여비 및 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한 결과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 출장여비를 2만원씩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공용차량을 이용한 공무원에게 1만원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등 총 69,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과 소방○○○○ 등 8명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임에도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감액하지 하지 않고 475,88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2호)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없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일반대상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추가지급은 일반대상자 중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10시간 ×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행사운영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안전문화팀은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외부인에 대한 식비를 행사운영비로 지출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행사운영을 위한 물품을 해당 행사와 연관성 없는 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 대한 식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 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고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3 계약 체결업무 등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한 바 훈련장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기업과의 공사 및 물품 계약 체결 시에도 거래실례가격 등 가격조사(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검토 없이 계약업체의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효성119안전센터 청사 외벽 부분 방수공사 등 8건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공사업체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사실 증명 확인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각 과에서 의뢰한 의용소방대 피복(신규대원) 구매 등 16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자(납부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지출의 절차) 제3항에 의거하여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은 제2항²³⁾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3)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물품 관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2년 취득한 전기온장고 등 자산취득성 물품 7점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행예산 과목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물품을 모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내방객을 위한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기념품을 지급하면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37호) (별표5)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203²⁴⁾, 205²⁵⁾)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²⁶⁾ 선택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 의회비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26 계약 체결업무 등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수의계약 내역을 확인한 바 본서 및 안전센터 사무실 바닥 왁스 코팅 작업 및 위생 청소 등 2건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실례가격 등 가격조사(시장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경제적인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교검토 없이 계약업체의 단일 견적서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였으며, 119재난대응과에서 요청한 소방활동지원 물품 구매 의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보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절(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2조(지출의 절차) 제3항에 의거하여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업무담당과장은 제2항27)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7)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확인한바 2020년 7월 ~ 2022년 5월까지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으로 집행한 총 40건에 대하여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하나 이를 징구하지 아니 하였으며, 집행대상에 있어서도 연계업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상하급 관계가 아닌 병렬적 관계의 기관을 대상으로 부의금을 집행하여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확대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3]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면·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부의금을 집행²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8)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28 예산집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2년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바 예산에 편성된 주방기구소독기 외 1종을 구매하지 않고 가스레인지 외 1종을 구매하여 예산을 편성된 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119안전센터 구급대기실 불박이장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경비를 사용할 수 없고 세출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이나 분야·부분·정책사업 간에 융통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의하면 시설장비 유지비의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소방청사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2년 상반기 소방청사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시행하면서 ☆☆119안전센터에서 자체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사무실 외벽 창문 누수 등 10건의 하자 사항을 본서에 요청하였으나, 이를 시설공사 하자검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거나 보수공사를 실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사항 없이 하자 검사를 종료하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해야 하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령 제70조(하자 검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30 공사계약 원가계산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1년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업법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를 계상하지 않는 등 견적서 원가계산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전기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등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40호, 2020.3.31)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 기준에 의하면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는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하고,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의 경우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전기공사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1 물품 관리 등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2년에 취득한 개인안전장비 등 자산취득성 물품 36종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물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 등 10점을 ☆☆119안전센터 외부 창고 뒤편에 적절한 관리없이 방치하는 등 물품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물품을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르면 집행예산 과목이나 구매자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물품을 모두 등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9조(보관의 원칙)에 따라 물품은 언제든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소방차량 무상보증 수리 이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무상 보증 기간에 있는 ◎◎물탱크(★★마☆☆☆☆) 차량의 고장(배수밸브 작동 불량)을 인근 정비업체에서 유상으로 수리하여 관련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소방차량은 특성상 차체와 특장으로 구분하여 제작되고 이에 따라 각 부분의 무상 수리 기간도 기준일을 서로 달리하여 보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발생한 고장은 무상 수리를 하여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소방차량을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33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에서는 201★.●●.●●. 준공된 ☆☆119안전센터와 관련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등 공유재산 관리대장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각 관서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등기·등록²⁹⁾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유재산의 대장(臺帳)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 경우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및 시행규칙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에 의하면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고,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등기·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공유재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서창119안전센터 등기 : 2018.11.14.

34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본서 공조설비 보수공사 등 4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및 물품 대금청구 시 대금청구 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금315,000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지 않는 등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등) ①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별표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 기준(제9조제2항 관련)에 의한 매입대상으로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기본법), 용역계약, 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매입 기준으로는 대금청구 금액의 2/100(다만 청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5 인지세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징구 소홀 [2]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119안전센터 신축 공사 사인채널 제작 공사 등 6건의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완강기 체험교실 안전장비 구입 등 12건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별표 1호에 규정된 세액에 의하면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9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 금액 2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 상대방은 계약사항 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100에 해당하는 지역 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IV. 예방민원분야 감사 사례

인천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

1 위험물의 저장 제한 의무 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한바, (주)■■■■ (◆◆구 ◆◆로 ○○○○)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공장 1층 작업실에 인쇄작업을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³⁰⁾을 저장·보관하다가 현장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제조소 등의 설치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 제4류 알코올류(제품명 : ISO 활성제)

2 자체점검 조치명령 대상 시정 여부 확인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대상 중 ■■마트(◆◆구 ◆◆로 ◎◎◎)등 2개소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빌딩(◆◆구 ◆◆로) 등 9개소에 대하여는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확인 기간 10일을 초과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점검결과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1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제5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 절차)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20. 5. 19. (주) ■■■물류창고 등 2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화재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관리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하다 적발 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 설계도서 미첨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구 ◇◇ 로 ◎◎◎)등 69건의 경우 설계도서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³¹⁾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 달라진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1)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 된 것

5 소방시설공사 시공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 5. 20. 제출된 ○○○○○○ ○○○○시설의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 및 완공검사 신청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공사업자인 (주)■ ■ ■ 건설, (주)■ ■ ■ 전기, ■ ■ ■ ■ (주)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거나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감리업자인 (주)■ ■ ■ ■ 는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공사현장과 다르게 거짓으로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 ❁ 동법 제16조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에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제14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0조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 ●. ●. 인천 ◇구 ◇◇ 로 ○○○ 소재 ■■■고시원에 대하여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하는 과정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2항에 따라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연기감지기를 설치(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제7조 제1항 단서³²⁾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하여야 하는 고시원에 대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감지기가 설치되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완비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의 공사완료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 등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 분포형감지기, 복합형 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축적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7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발급 업무처리 부적정 (2)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점(◇구 ◇◇로 271)등 69건의 경우 설계도서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안전시설 등의 완비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³³⁾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설치신고 시 제출한 설계도서와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 달라진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3) 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내부구획의 재료, 비상구 및 창호도 등이 표시 된 것

8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지적내용】

☆☆소방서에 202●. ●. ●. 제출된 소방감리 결과보고서 및 완공검사 대상 (●●● 건물)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11조 (입상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³⁴⁾ 및 제16조(함)³⁵⁾를 위반하여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감리업자인 (주)■엔지니어링은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공사 현장과 다르게 거짓으로 제출하여 감사기간 중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20조에서는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❷ 또한, 동법 제16조에서는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에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의 소방용품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길이 1 m를 초과하는 주배관의 최상부에는 4방향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가동중량 1,000 kg 이하인 설비는 바닥면에 고정되는 길이가 긴 변의 양쪽 모서리에 직경 12 mm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여야 하며 앵커볼트의 근입 깊이는 10 cm 이상으로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9 위험물제조소등 품명·수량 변경신고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터미널(주) 인천사업소 등 5개소에 대하여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신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 없이 이를 수리하여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 2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민원업무 처리 절차 부적정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발전(주) ■■발전본부 등 2개소에 대한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위험물저장소 용도폐지 신고서를 즉시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접수를 보류한 상태에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 등의 폐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 신고)의 규정에 적합함을 확인한 이후에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 ❁ 위험물규제업무 처리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위험물 및 가연성증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조치,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해체·철거하거나 당해 시설을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 신고위반

【지적내용】

□□주유소 대표자(●●●)는 2019. 5. 1 □□주유소 건물주 ●●●로부터 주유취급소 1, 지하탱크저장소 1 등 ○○주유소의 전 시설물을 임차 후 지위를 구)대표자 ●●●와 ●●●●부터 각각 승계를 받아 주유취급소 대해서는 2019. 5. 13. 지위승계신고를 하였으나, 지하탱크저장소 1개소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위승계를 하고 약 18개월이 지나서 신고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제1항 의거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 등을 양도·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인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 ❁ 동조 제3항에 따라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의 현재 휴업 중인 특정소방대상물 ■■■■■ 등 41개소의 자체점검 대상의 업무처리 사항을 검토한바, ■■■ 등 13개소 대상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자체점검 유예신청을 접수하여 1년간 자체점검 유예처리를 하였으나, ◆◆◆ 등 28개소 대상들은 위 지침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체점검 의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유예처리 하였으며, 관할 119안전센터로 하여금 순찰을 통해 해당 영업장의 재개 여부만 확인하는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종합정밀점검대상의 작동기능점검 시기는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구]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38, 2016. 4. 17.] 기준을 적용하는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가. 관계인이 유예신청을 할 경우 신고 접수 후 해당여부 판단(필요시 현장방문 실시)하여 유예여부 결정 후 그 결정사항을 결과 통지서로 회신하여야 하며, 나. 소방관서장이 특별조사 등에 의하여 인지한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연락이 가능한 경우 ‘가’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되, 이전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의법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관계인에게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군·구청 등 유관부서에 폐쇄·폐업 여부 확인 또는 현장확인을 통하여 유예대상 확인, 의법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3 소방청사건물 작동기능 및 외관점검 태만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청사 건물이 201●. ●. ●. 사용승인되어 매년 7월중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구조대장)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사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외관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나 이 또한 누락하여 소방청사 건물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및 외관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 ❁ 그리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은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법 7일 이내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 제 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점검하는 외관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통보현황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허가관청에서 다중이용업소의 허가 등의 통보사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주·면적·업종 변경 등을 확인하여 안전 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또는 재발급, 소방안전교육 안내 그리고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신규 또는 재가입의 독려 업무 등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야 했으나,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청 환경위생과 및 문화관광과 에서 ■■■■등 89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허가 등 통보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한 처리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지 않고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를 하는 행정기관은 허가 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①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②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③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을 통보하여야 하며,
- ❁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①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영업 내용의 변경 ③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④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중의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허가관청으로부터 위의 사항에 대해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허가 등 사항 처리 접수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 7. 7. 완공된 ◇◇ ◇◇ ○ 로 66 소재 ■■■ 건물에 대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 확인하여 감리결과보고서와 소방시설 공사 현장을 비교·확인한바 소방시설공사 및 감리결과에 이상 여부를 발견할 수는 없었으나, 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상 작동토록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확인해 본 결과, 제수변 개방 시 제수변으로부터 용수가 누수되어 넘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소화전으로부터 적정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제1항에 의하면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완공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소방시설공사 현장 소방기술자 미배치

【지적내용】

2020년도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20. 12. 01. 인천광역시
 ◇◇구 ◇◇동 ○○○○-4 소재 「■■■■중학교 건물」 공사 현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현황과 같이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소방시설을 시공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시공)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7 위험물 옥내저장소 내 허가수량 이상 위험물 저장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한 바, 위험물 안전관리자 ■■■은 사업장내 옥내저장소에 허가된 제6류 위험물(질산)을 관할 소방서에 변경신고³⁶⁾를 하지 아니하고 저장·보관하다가 현장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2항에 의하면 제조소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제3항에 따라서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별표 18(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제조소 등에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중요기준)

36) 당시 옥내저장소에 보관중인 전체 위험물의 품명, 수량 및 지정배수는 허가사항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중요기준 위반이 아닌 수량변경 신고위반에 해당됨.

18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반자 수시교육 이수확인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민원팀에서는 2018년 2월 ~ 2020년 11월까지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5개소에 대해 적발(과태료 부과) 사항이 확인 되었으나, 다중이용업주에게 수시교육 안내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수시교육을 받지 않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3항 제2호에는 “수시교육 :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 제1항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 하고,
- ❁ 동법 제5조제4항에는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 ·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신규 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 신고 접수 시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 교육일 10일 전

19 소방시설공사 도급계약 위반 및 감리결과보고서 거짓 제출 [2]

【지적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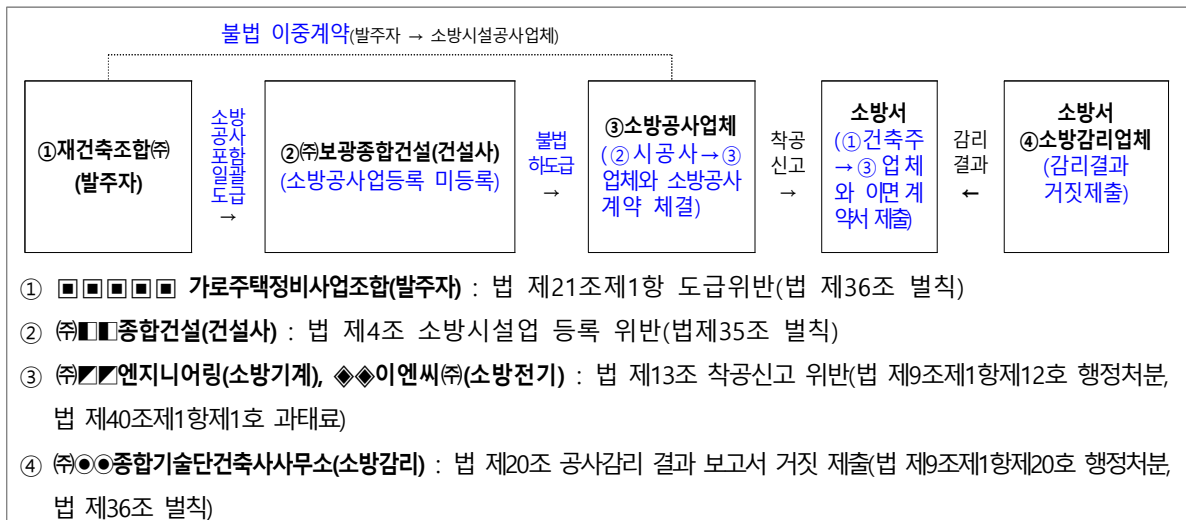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 관내에 위치한 소방시설 완공 대상(○○○시
◆◆◆아파트)에 대해 현장 확인한바, ◆◆◆아파트 건설공사 발주자인 ◆◆◆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대표자 ■■■)은 적발 대상 건축 시공을 발주하면서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시공사인 (주)◆◆◆종합건설(대표 ■■■)에
일괄 도급하여 법 제21조 제1항(공사의 도급)을 위반하였으며, (주)◆◆◆종합건설도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소방시설공사를 수급함으로써 법 제4조(소방
시설업의 등록)를 위반 하였으며, (주)●●●●●건축사사무소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성능시험조사표와 감리일지 상에 완강기가 화재안전기준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설치 상태가 적정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으며,
적발 대상 건물의 소방시설 공사업체인 (주)○○○엔지니어링(소방기계), ○○○엔씨(주)
(소방전기)는 소방시설공사를 위하여 계약을 발주자인 ◆◆◆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조합과 체결하지 아니하고 시공사인 (주)◆◆◆종합건설과 체결하였음에도
☆☆소방서에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첨부서류인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발주자인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체결한 것처럼
꾸며 거짓신고를 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동법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소방시설공사의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동법 제13조(착공신고) 제1항**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 소방시설감리업자도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리 결과를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발사실 도해 및 요약



20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 제조소등 허가대상인 '■■■청'은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인사이동 이동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규정된 신고일자 이내에 신고(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아파트(○○○360번길16)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이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을 유지·관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제1항에 의거,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안전관리자가 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 역시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해임된 경우 같은 직위 또는 동일한 업무의 담당자를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 ❷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기준 등 의무 위반 (비상구 전실 물건적치)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중 임의 선정하여,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실태를 확인한 바, ■■■■[인천 ◇구 ◇◇로 ◎◎번길 ○○(○○동)]의 경우 영업장 내부 비상구 전실에 쇼파 등의 장애물을 적치 하였으며, 피난상 유효한 개구부에 블라인드를 설치한 것을 현장 적발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동 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2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2019년 7월 종합감사 이후) 내에 처리한 건축 허가동의 업무를 검토한 바, ■■건물 등 5개 대상에 대하여 소방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 배관에 가요성 이음장치를 미설계하였는데도, 이를 확인 하지 않고 건축허가 동의를 처리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동의 동의 등)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등³⁷⁾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동의 동의 등) 제4항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또한, 2021년 2월 19일자로 개정·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수원) 제3호에 의거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 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 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 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7)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23 위험물 저장의 제한 의무 위반 [무허가 위험물 저장]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를 확인한바, ■■[인천 ◇구
◎◎대로○○번길(◇◇동)]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공장부지 내
컨테이너에서 세척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보관하다가
현장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소
등을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설치 허가 및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과태료) 유지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2021년 1월 28일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배정 계획에 의거 119재난대응과에서 배정 받은 2021년도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일련번호 : 2021-001~2021-150)를 사용함에 있어, 아무런 이유없이 배정받은 보고서 중 10매를 분실하였습니다. 분실한 위반 사실 보고서에 대해서도 사유서를 작성하여 내부 문서 보고하지 않고 소방관계 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유지·관리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감사담당관실-4892(2017.05.3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개선방안 시달 통보』에 따라 과태료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처리 절차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분실, 오기 및 훼손 발생 시 해당 부서에서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119재난대응과로 문서 보고하고 오기 및 훼손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담당자는 이를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분실, 오기 및 훼손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2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 ■■프라자(1동) 관계인은 건축물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1. 5. 12.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을 유지·관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따라 관계인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부터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 소홀 [2]

【지적내용】

☆☆소방서 관내 ■■■■호텔의 대표 음○○은 신청에 의해 2022. 3. 3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유예를 받은 후, 종료 기준일로부터 30일(2022. 4. 30.)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2022. 5. 27.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지 아니한 상태로 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소방청『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관계인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 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소방서에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사용개시일(「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용)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7 소방시설공사 착공·완공 업무시 개정 법령 검토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민원팀에서는 착공신고 업무와 소방감리결과 보고서 처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첨부 서류로 민원 접수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하나, 개정 여부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 개정 전 민원 서류로 접수 받아 결과를 처리하는 등 착공신고 및 소방감리결과 보고서 검토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착공신고 등)에 의하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감리결과와 통보 등)에 의하면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2021년 6월 10일자로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2021년 4월 1일자로 개정되어 2021년 10월 1일 자로 시행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 고시에서 착공 신고 시와 감리결과보고서 보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보완 되었습니다.

28 민원처리 세외수입 납입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의 2020. 1. 1. ~ 2021. 10. 31.까지 민원 수수료 등 세외 수입금 징수업무를 확인한 결과,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 신청 등 160건에 대한 수입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및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4조(수입금의 납입) 제1항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세외 수입금을 징수시 업무담당자 개인 책상에 보관하였다가 일정 기간 및 금액이 모일시 소재지내 시금고(시금고은행 지점)에 납부 하는 등 해당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지방회계법』 제20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따르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14조 (수입금의 납입) 제1항에 수수료의 수입금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금고에 납입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서는 2020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117건 중 8건에 대하여 민원 접수처리 및 처리를 위한 현장 확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기타 업무 출장 중 실무담당자가 임의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 처리하였으며 처리한 민원 업무에 대해서도 내부 결재 등 사무 전결 처리 후 국민신문고 입력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민원인에게 유선 연락을 통하여 조치 결과를 안내 후 민원인에게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을 취하하도록 하여 민원을 종결시키는 등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 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특히,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8조의 2에 따라 신청된 민원을 신속히 접수 및 처리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5조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 등을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에 입력함으로써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0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검토 소홀 (2)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2019년 12월 종합감사 이후) 내에 처리한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검토한바, ■■■외 1인 건물 등 16개 대상에 대하여 소방수조와 연결되는 소화배관에 가요성 이음장치를 미설계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 동의를 처리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등³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 제4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또한, 2021년 2월 19일 자로 개정·시행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4조(수원) 제3호에 의거 수조와 연결되는 소화 배관에는 지진 시 상대 변위를 고려하여 가요성 이음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8)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31 이동탱크저장소 설치 및 변경 허가 위반 [상치 장소 변경]

【지적내용】

☆☆소방서의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사항을 확인한바, 위의 이동탱크저장소(6대) 설치자들은 ‘인천시 ◇구 ○○로 ○○-1(□□□)’의 장소에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 장소로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해당 장소에 의료시설 (대지면적 : 2,045㎡, 연면적 7631.08㎡)이 2021년 2월 ★일 건축 허가되어(허가관청 : ☆☆구청) 현재까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허가일 이후 더 이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상치 장소로 사용함이 불가능하고 또한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이동탱크저장소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적법한 처분 없이 관리하고 있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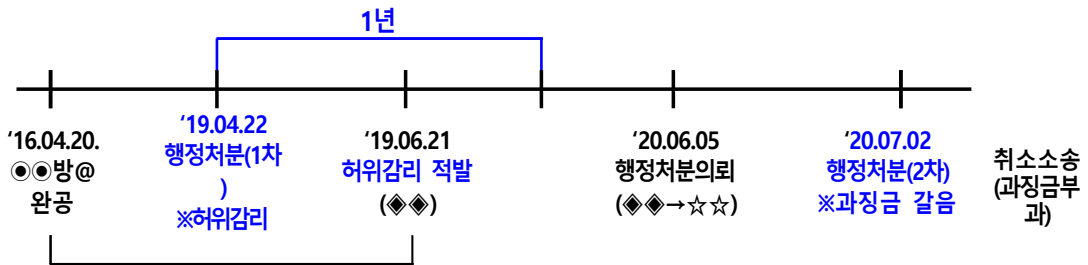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 후단에 의하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에 의하면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7. 이동탱크 저장소	가. 상치 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32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차수 산정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관내 등록업체인 소방공사감리업체 ■■엔지니어링(주)의 행정처분을 처리 함에 있어 2019년 4월 22일 영업정지 1개월(1차)을 처분하고, 2019년 6월 21일 ◆◆ ☆☆소방서에서 1차 처분과 같은 위반행위인 ‘허위감리’로 적발되어 통보된 사안에서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문헌을 그대로 따라 행정처분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2020년 7월 2일 영업정지 3개월(2차) 처분을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에서 정한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

1. 일반기준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아 법 제11조 또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 ☼ 소방청에서 법제처에 요청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되는 위반횟수 산정방식’에 대한 법령 해석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종전 행정처분에 따른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해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가중된 행정처분을 부과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례 참조) 따라서 위반행위의 차수를 고려하여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면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 ☼ 이 사안의 경우 추가 적발된 위반행위를 한 시점은(2016. 4. 20.) 1차 행정처분일 (2019. 4. 22.)전이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 행정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 4월 22일 행정처분을 한 후 1년 이내에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행정처분 기준상 행정처분 2차가 아니라 여전히 행정처분 1차가 되는 것입니다.

33 자체점검 조치명령 발부 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자체점검 결과 소방시설 등의 불량 등으로 조치명령이 필요한 대상에 조치명령을 발부할 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자체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한 소방관리업체의 보고서를 스캔하여 조치명령의 붙임으로 첨부하여 조치명령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점검 결과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되어 있지 아니 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조치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 조치 대상 내용 및 근거 법령의 조문을 기재하여야 하며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 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 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2020년 6월 종합감사 이후) 내에 처리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 업무를 확인한바,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소 설치 허가 신청(면적 280㎡)에 대하여 복합용도 건축물의 옥내저장소의 기준³⁹⁾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치 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옥내저장소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완공검사 시(면적 252㎡)에도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제조소 등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한 별표5의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옥내저장소는 단층(1층)으로서 위험물만 저장하는 독립된 건물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지정수량 20배 이하를 저장하는 옥내저장소는 복합용도의 기준을 갖추면 하나의 건물 내에 위험물 옥내저장소와 다른 용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9) 옥내저장소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7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5 건축허가등 동의 시 소방시설의 설계기준 검토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2020년 6월 종합감사 이후) 내에 처리한 건축허가동의 업무를 검토한바, ■■■건물 등 3개 대상에 대하여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입체형 유도등을 일부 층 미설계하였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 동의를 처리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 제1항에 의거 건축허가 등⁴⁰⁾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 제4조(건축허가 등의 동의 등)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 또한, 2021년 7월 8일자로 개정·시행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 제5조(피난구유도등) 제3항에 의거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와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는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입체형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0)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

36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업무처리 지침 확행

【지적내용】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유예현황을 확인한 바, ◇구 ◎◎로 0번길 00-0에 위치한 ■■■■ 건축물의 코호트 격리 종료 후 시설 환경 정비(기간: 2021.01.14. ~ 2021.02.28.)를 사유로 2021년 1월 중에 실시해야 하는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을 유예신청을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는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해석하거나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업무처리지침」(市 예방안전과-6973, 2021. 4. 22.)을 작성하여 시달한 바 있습니다.
- ❁ 인천소방본부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업무처리지침 상 유예 대상은 ①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 ②건축물 전체가 경매되거나 압류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 된 경우 ③건물이 증축·개축·재축·대수선 등 건축공사로 인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관할 소방서 자체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자모원의 ‘코호트 격리 종료 후 시설 환경 정비’ 라는 자체점검 유예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소방서 자체심의회를 개최하여 그 사유에 대한 유예 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37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2020년 10월 종합감사 이후) 내에 처리한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업무를 확인한바,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 후 당해 위험물 제조소 등의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인이 제출한 위험물 시설을 철거한 사진대지, 자동차 등록 원부 등만 확인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를 처리하는 등 제조소 등 용도폐지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제조소 등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용도폐지신고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 사실을 표시하여 용도폐지 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위험물예방행정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는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의 제거 및 해체·철거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고, 적합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8 화재안전정보조사 조치명령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는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정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자발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발부하고 그 후 조사 시 확인되지 않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자진개선, 의견제출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조치명령서를 재발부하여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화재안전정보조사개시 7일 전까지 관계인 서면 등(전화 및 구두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위법 사항이 있을시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서(사전처분 통지 안내) 부분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부분에 기재하여 교부 하며, 필요시 자인서를 징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제9조에 의하면 조사 결과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는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 제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할 위반사항⁴¹⁾과 자진으로 개선토록 유도할 사항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표】 업무처리 절차도

<자진개선 보완명령>				⇒ 자진개선 미이행시	<조치명령>	
①위반사항 발견	②의견제출	③자진개선	④조치사항 확인*		⑤의견제출	⑥조치명령 보완
(기간예시) '21.3.2.	3.3.~12. (10일 이상)	3.13.~3.22. (10일 이내)	3.23 (1일)		확인일 익일부터 (10일 이상)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

41) 화재안전정보조사 운영지침 제9조(조사결과 위법사항 조치 등)에 따라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등 제 규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할 위반사항(중대위반사항)

-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 ②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④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39 자체점검 조치명령서 송달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명령서 송달현황을 확인한바, 각 관계인의 이행 의무가 상존하는 특정소방대상물(복합건축물 등)에 자체점검 결과 조치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수신인을 ‘[] [] [] [] 관계인’으로만 일괄 지정하여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여 조치명령의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조치명령을 발부하는 등 조치명령 송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⁴²⁾ 제23조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부적합시 관계인에게 보완 요구 가능)
- ❁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행계획 완료 결과가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방문하여 그 이행계획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계인이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관계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6항)
-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4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2. 1.]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참고자료】 관련판례

○ 조치명령을 내릴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

《 관련 판례 》

※부산지방법원 2015.4.30. 선고 2014노2496 판결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정보완명령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① 스프링클러 5개소 미설치, ② 스프링클러 2개소 고정불량”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 당시 시정 또는 보완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위치 및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시정보완명령을 행정절차법 제23조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 상대방이 시정 보완 명령의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봄

《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전매청 제조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3.11.11. 대통령으로부터 징계파면처분을 당하였고, 같은 달 15. 원고를 파면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통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달되어 원고의 처인 소외 김○덕이 이를 수령한 것 등은 사실이나 위 소외인은 원고가 파면처분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원고에게 위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처분해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한 후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만 처분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주소지로 인사발령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의 처 김○덕은 위 통지서를 수령하여서는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처분해 버렸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에게 통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어서 그 처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대로라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6.6.8. 선고 75누63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의 처가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인사발령통지서를 영수한 이상 비록 당시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중이었고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다가 더 나아가 원고의 처는 영수한 통지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폐기해 버렸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할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다.

40 건축허가 등 동의 처리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 ○ (◇◇동) 소재의 ■■여자고등학교 경비동(연면적 212.69㎡)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여자고등학교장으로부터의 ☆☆여고 경비동 2층 증축공사 관련 소방 동의 요청에 대하여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아님으로 통보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❷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에서는 건축허가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 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중 100제곱미터 이상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1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인 201◆. ◆. ◆. ■■대학교 ■■대학 기숙사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바,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 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령 제15조의5(임시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등)제2항에서는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를 별표 5의2를 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42 소방감리원 세부적인 배치기준 위반

【지적내용】

2019년도 ☆☆소방서 종합감사 기간 중인 인천광역시 ◇구 ◇◇동 ○-○ 소재 「▣▣종합건설(주) 1차 건물」(상주 공사감리 대상)에 대하여 현장 인한바,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이 현장 내 부재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에 의하면 감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에 따라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을 포함한다.)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 감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민원정보시스템 방염성능검사관리 현행화 미이행

【지적내용】

☆☆소방서 최근 3년간 각각 2017년도 61건, 2018년도 104건, 2019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43건 도합 208건의 특정소방대상물 방염성능검사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접수대장으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그 자료를 입력하지 아니하여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철저 지시(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909, 2018.03.14. 및 인천광역시 예방안전과-3631, 2018.03.22)에 따르면 최근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에 있어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가 부실하게 작성·관리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자료가 입력 관리되어 화재의 경계·진압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변동되거나 추가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한바 있습니다.
- ❁ 또한 민원담당자는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민원접수처리 후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방염성능검사 관리에 기록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44 위험물제조소 등 등록면허세 관련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 관할변경 허가통보 현황을 확인한 바, 총 13개 차량의 관할변경 허가통보 문서를 접수한 후 관할(●●구청) 등록면허세 담당 부서에 전 설치자에 대한 정기 등록면허세가 부과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면허취소 통보하여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위험물제조소 등⁴³⁾의 지위승계, 이동탱크저장소 변경허가 등 면허 부여 시 ■■주유소 등 4개소의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영수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위 대상의 등록면허세가 미납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규제업무처리규정 제4조(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 등)제2항제2목에 따라 신)허가청에 변경허가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변경허가절차에 따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이동탱크저장소 관할 변경 통지서에 의하여 변경 허가 사실을 구)허가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 지방세법 제38조의 2(면허에 관한 통보)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 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지방세법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면허 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5조(신고납부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⁴⁴⁾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 하여야 합니다.

43)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44)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매년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종

45 소방안전대책 관련 기부물품 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추진한 각종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하여 기부금품에 관한 처리현황을 조사한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의 사업을 위한 소화기, 감지기 등의 기증품을 취약계층 및 취약 시설에 보급하면서 ■■■■아울렛 등 2개 기탁자에 대해서는 기부 심의를 거쳐 기부 물품을 보급하였으나, ◆◆목재 등 15개 업체의 기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없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기부금품의 모집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❷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행정 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 된다 할 것이며, 자발적인 기탁 금품을 기탁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기탁 하려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의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6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대상 행정처분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 ●. ●. ■■주유소(◆구 ◎◎로 218)에 대한 주유취급소 변경허가 위반 적발 건에 대하여 201●. ■. ■. 행정처분 1차 「경고」하기로 내부 의사를 결정하고 당사자인 ■■주유소 대표 ○○○에게 201●. ■. ■. ~ 201●. ■. (10일간)까지 의견제출기한을 통지한 바 있으나, 당사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제1항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치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허가 없이 변경한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2호에 따른 벌칙 및 동법 제14조(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제2항에 의거한 조치명령과 더불어 동법 제12조(제조소 등 설치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기준) [별표 2] 제2호 가목(1)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 ⊙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동법 제27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동법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및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6조(고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종국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및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 여부, 청구 절차,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V. 대응구조구급분야 감사 사례

1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 결정 절차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 6. 11. ○○○에 대하여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징수유예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절차 없이 징수유예를 결정하였으며, 징수유예 기간을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9개월을 초과하여 12개월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징수유예(분할납부) 결정 후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였으나 동일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납부기일의 연기) 결정을 하는 등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호⁴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증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를 납부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3에 따라 직권으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9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❷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의4(징수유예 등의 취소)에서는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징수유예 등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방응원협정 대상 정비·점검 등 업무 추진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응원협정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응원협정 기관에 대한 출동 및 동원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정기 및 수시 소방응원협정 정비계획을 미수립 하였으며 ■■건설 중장비 등 2개소의 소방응원협정서 2건에 대한 관리소홀 등 소방응원협정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본법 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에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을 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4조(응원) 및 제51조(긴급구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응급조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군·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단체의 장에게 인력·장비·자재 등 필요한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인천소방본부에서 시달된 2018, 2019년도 소방 응원 협정 정비계획에 의하면 소방 응원 협정의 점검을 정기(매년 1회), 수시(자체 계획) 수립하여 소방 응원 협정서 관리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정비하여서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3 화재증거물 수집 관리 절차 준수 소홀 (관계인 동의 누락)

【지적내용】

2020.01.12. ■■■연립 등 3건의 화재 현장조사에 있어 증거물을 채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 후 증거물 처리에 관한 관계인의 서명을 질문기록서 상에 누락하여 화재증거물 폐기 시 관계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증거물 수집관리규칙 제6조(증거물 보관·이동)의 규정에 따라 증거물은 수집 단계부터 검사 및 감정이 완료되어 반환 또는 폐기되는 전 과정에 있어서 화재조사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 및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하에 행해져야 하며 증거물의 보관 및 이동은 장소 및 방법, 책임자 등이 지정된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며, 책임자는 전 과정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1. 증거물 최초상태, 개봉 일자, 개봉 자 2. 증거물 발신 일자, 발신자 3. 증거물 수신 일자, 수신자 4. 증거 관리가 변경되었을 때 기타 사항 기재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보관은 전용실 또는 전용함 등 변형이나 파손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화재조사와 관계없는 자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며, 보관관리 이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 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여야 하지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을 때는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화재증거물 폐기 시 법적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화재조사서류 중 별지 제4호 서식 질문기록서 상에 감정 후 증거물에 대한 반환 또는 폐기 여부를 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4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대응구조구급과-5621(2018.12.07.)호 「12월중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시회의 참석결과 알림」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 대장 ○○○ 등 12명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면서 별지 제9호서식 신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임무)에 의거 의용소방대는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 예방업무의 보조 임무를 수행하며 동법 제15조(소집수당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이에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여비) 제1항에서 시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대원을 소집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소집수당)에 따르면 대원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교육 여비(소집수당) 신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소방 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기호흡기 적재관리 이행 소홀 및 화재조사 근무체계 미확보

【지적내용】

☆☆소방서 현장대응단에서는 2020년 5월 19일 교대점검 이후 출동차량 점검 시 조사차(공기호흡기 1세트 부족) 및 개인공기호흡기 등지게 벨크로 미부착 등 개인안전장비 출동 차량 비치 부적정 등 교대점검 이행에 대해 소홀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대형화재 발생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요원 2인 근무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20. ★. ★.(화) 화재조사 출동대 편성과 관련하여 화재조사차 엔진 시동 이상 점검 입고에 따라 2인 근무에서 1인 근무(1인 조사차 점검 출장)로 유지한 상태로, 2인 근무체계 확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4조(안전장비의 정기점검 및 착용) 제2에 의거 소방공무원은 근무 교대 시, 현장 투입 전·후, 그 밖에 필요한 때에는 안전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현장 출동 시 보호장비 착용 기준 별표 3에 따라 완전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현장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 교대 시간(주간·야간)에 개인 안전 장비 교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소방공무원 체력검정평가 미실시자 심의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의 2018년도, 2019년도 체력검정 미실시자가 제출한 서류(진단서 등)를 조사한바, 총 22명의 진단서 등 제출서류에 치료 또는 안정 가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로 체력검정 평가가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음에도 이를 인정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현장대응과-3429(2019. 3. 12.)호 『2019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본 계획 시달(통보)』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측정관 등 임명, 체력검정 미실시자 적합 여부 판단, 종목별 체력검정 방법 준수 여부 감독 등 공정한 평가, 안전사고 방지 등 체력검정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 인천광역시 현장대응과-3429(2019. 3. 12.)호 『2019년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기본계획 시달(통보)』의 체력검정 미실시 인정기준에 따르면 질병 등 신체장애로 체력평가가 곤란한 자에 대한 제출서류(진단서 등)에 체력평가 실시기간이 치료 또는 안정 가료 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7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세트) 지급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개인보호장비를 지급 및 관리 함에 있어 2020년 ☆☆소방서 종합감사 현재까지 출동대원 1인당 각 1점씩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세트) 지급하여야 하나 현장대응단 개인별 보호장비를 미지급하는 등 개인보호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소방 장비의 보유기준) 및 별표 2에 의하면 소방차량에 탑승하는 소방대원의 장비 보유기준에 1인당 공기호흡기 1세트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인천광역시 현장대응단-10820(2019.12.09.)호 「신형공기호흡기 보급에 따른 관리개선 방침 시달」에 의거 소방서 현장대응단도 준 진압 대원으로 1인당 공기호흡기 세트 1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 신규 구급대원 교육담당관 자격 부적정

【지적내용】

2019년도 ☆☆☆소방서에 임용된 신규 구급대원 7명에 대한 일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면서 119구급대장, 구급지도관 또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의 1급 응급구조사 16명을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구급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구급대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상 구급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해 매일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일상 구급 교육 훈련은 1. 공직기강 확립 등 구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책 교육 2. 응급의료 전문지식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 3. 구급대원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구급실무 적응에 필요한 교육 4. 업무수행 중 필요한 구급활동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 규정 제10조(일상 구급교육훈련의 방법)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소방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제24조의 직장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기관의 장은 동 규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규로 임용된 구급대원을 교육하고자 하는 때에는 119구급대장, 구급지도관 또는 5년 이상을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를 교육담당관으로 지정하여 7일 이상 또는 35시간 이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9 소방전술훈련평가 제외자 통보 부적정

【지적내용】

2019년도 ☆☆☆소방서에 상·하반기 소방전술훈련평가시 휴직자 소방교 ○○○ 등 2명에 대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평정점을 부여하여 통보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이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에 의하면 전술훈련평가는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팀별 또는 개인별 전술 및 기술 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며,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계급별로 상(3할), 중(6할), 하(1할)의 분포 및 점수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119안전센터, 구조대, 항공대 등 각 부서의 장에 대한 전술훈련평가는 소속직원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0점으로 평정하되, 교육·파견·출장·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술훈련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으로 하며, 그 직전 평정단위기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1.0점으로 평정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 또한 “2019년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 추진계획” [인천광역시 현장 대응단-3261(2019.5.13.)호]에 의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 평가 시 휴직의 경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사부서에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46)에 의거 평정을 하므로 소방전술훈련 평가 시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소방전술훈련 평가 제외자로 분류하여 소방행정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6) 1. 직장훈련성적평정점이 없는 평정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가장 최근의 평정단위기간평정점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평정한 평정단위기간평정점 + 2.67점)/2

10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절차 미준수

【지적내용】

☆☆소방서에서 2019년~2020년에 지급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전인 최초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대장에게 제출할 때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이 있고,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장과 해당 학교장 및 대원 등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라 2년 이상 근속한 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학교에 재학하며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또는 학장·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모범대원의 자녀 중 학업성적 및 기능·체육 또는 예능이 뛰어난 사람 3. 소방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대상자 선발 절차를 살펴보면,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의용소방대원은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학장 또는 총장) 추천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를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한 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천서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발하고 그 결과를 대장과 해당 학교장 및 대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대원 등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1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종합감사기간(2019.4~2021.3) 중 민원정보시스템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 입력 현황을 살펴본 바, ☆☆비상소화장치함 3호 등 99개소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입력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조사 결과 입력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소방본부에서 시달한 2019년~2020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계획⁴⁷⁾에 의하면 비상소화장치를 포함한 전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상 조사부 입력 후 전자 내부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조사부(종이)는 민원정보시스템 조사부 전자결재로 대체하고 일반현황과 고장내역(보수) 등 필수이력만 종이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47) 소방본부 현장대응과-1159(2019.01.22.)호 및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99(2020.01.03.)호

12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펌블런스) 운영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 운영 중인 ☆☆펌프차 등 펌블런스 5대의 탑승대원에 대한 구급자격 현황을 살펴본 바, 감사일 현재 기준(2021년 4월) 5개 센터 15개 팀 중 5개 팀에서 구급 자격자를 배치하지 않고 펌블런스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편성·운영)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심정지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의 펌프차를 펌블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펌블런스에 탑승하는 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구급자격자⁴⁸⁾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배치할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4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13 본서 심신안정실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본서 심신안정실의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한 결과 환기시설의 부재 및 총 4점의 피톤치드발생기가 고장 방치되어 있었으며, 뇌파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설명서 및 안내문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25조(심신안정 환경조성) 및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보건안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은 심신안정실 등을 설치·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이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소방청사에 설치된 심신안정실은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및 출동으로 인하여 체력적, 심리적 피로누적에 따른 생체리듬 불균형과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의 치유를 위함이 그 설치의 목적이며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및 청사의 여건에 맞는 장비가 배치되어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14 소방민원정보시스템 현행화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19년 7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등 167건의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하여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상 위법사항 (과태료 부과일 및 금액 등)을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2016 소방특별조사 운영실태 지도·점검결과」 및 「2021년 특정소방대상물 일제정비 계획」에 따르면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 입력(정비)을 통해 현행화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소방기본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과중된 부과 처분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위법사항의 정확한 정보 입력을 하여야 합니다.

15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 추가선발 미흡

【지적내용】

☆☆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20년도 자녀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2명의 학생에 대하여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2021년도에는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2명의 학생 중 1명을 선발하였으나, 나머지 1명에 대하여 추가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개정 전 명칭) 제4조(선발)에 따르면 의용소방대 자녀장학생은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법령에 명시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되면 그 수만큼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복 수혜횟수(대원 1인당 3회 이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엄연히 장학생 최초 선발 시 장학생 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부득이하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구제책이며, 의용소방대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대원들의 소속감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장치입니다.

16 풍수해 대비 비상상황근무 소집인원 산정 미흡

【지적내용】

☆☆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실시된 총 5회의 풍수해 비상상황근무 중 4회의 비상상황근무에서 소집 인원의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정하지 않아 초기상황대응반 소집 인원을 부족하게 구성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및 제14조(발령)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등은 재난 상황의 유형(화재 비상, 구조·구급 비상 및 풍수해 등 그밖의 재난 비상)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소방서에서 수립한 2020년도 및 2021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긴급구조 대책에 따르면 호우경보, 태풍주의보, 대설경보 발효 시에는 전 직원(비번근무자)의 1/5이 태풍경보 발효 시에는 전 직원(비번근무자)의 1/3이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17 구급장비 불용 및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입력 관리 미흡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119재난대응과에서 현황을 관리하며, 119안전센터에서 운용·사용 중인 구급(필수)장비 등과 관련, 실제 보유장비 현황과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상의 현황이 상이하며(중복입력 및 누락 등) 내용연수가 경과된 장비의 불용 처리가 미흡하여 불용률이 낮고 노후율이 높아 관련 업무 추진의 효율을 저하 시킨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제2항에 따르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및 제7조(소방기관별 소방장비 보유기준)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구급장비에 대하여 불용 등 처리를 하여 소방장비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 출동차량 안전운행 의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최근 2년간 긴급출동 중이 아닌 귀소 및 출장 중 제한 속도 또는 지정차로 준수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발부된 사항이 3건 있어 출동차량 안전 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위의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아울러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SSG 5 소방차량 안전운행 표준지침 중 5.1 안전운행 일반사항에 의하면 운전요원은 제반 교통법규·지침을 준수하고 방어운전, 적정속도 주행,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이면도로 또는 협소 도로에서는 보행자 및 자전거 등 돌발 상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19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 평정점 부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를 하며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소속직원의 전술훈련평가 평정점 부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❶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교육훈련성적의 평정) 및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의 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의 평정은 연 2회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❷ 또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 제4조(전술훈련평가)에 따라 전술훈련평가는 소방관서별로 전술훈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계급별로 상(3할), 중(6할), 하(1할)의 분포에 맞도록 평가하여야 하며 『2020년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 추진계획』[市 현장대응단-1963호(2020.2.11.)]에 따르면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⁴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9) 소방공무원 전술훈련평가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① 당해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② 바로 하위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자
- ③ 고령자
- ④ 최초임용일이 앞선 자
- ⑤ 상기 사유로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술훈련평가위원장이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20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0년, 2021년 소방활동 자료조사 연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대상 79개소를 누락하는 등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제1호·제2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소방용수시설조사 결과 입력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 급수탑 4호 등 270개소에 대하여 정기 소방용수시설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를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 의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결과보고 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소방본부에서 시달한 2020년, 2021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계획⁵⁰⁾에 의하면 비상소화장치를 포함한 전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 상 조사부 입력 후 전자 내부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조사부(종이)는 민원정보 시스템 조사부 전자결재로 대체하고 일반현황과 고장 내역(보수) 등 필수이력만 종이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50) 소방본부 119재난대책과-99(2020.01.03.)호 및 소방본부119재난대책과-899(2021.01.15.)호

22 구급활동상황 기록관리 유지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거부한 37건의 출동에 대하여 이송거부·거절 확인서 작성하지 않은 등 구급활동상황 기록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응급환자 등의 이송 거부)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응급환자의 의사(意思)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응급환자 등의 이송거부)에 따라 구급 거절·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송을 거부한 응급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서명을 받고 소속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한 뒤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다만, 응급환자의 병력·증상 및 주변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이송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 이송거부자가 2회에 걸쳐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는 확인서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이를 목격한 사람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목격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목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23 119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구조장비 위생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유해동물 생물체 포획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출동건 166건 중 51건(119구조대 51건, 생활안전대 0건)에 대하여만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등 구조장비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 등 수립·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감염관리대책), 2020년 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⁵¹⁾에 따라 월 1회(정기) 이상 공기호흡기 등 신체보호용 장비에 위생관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 유해물질 누출, 유해동물 포획 시 교통사고(외상환자), 사상자(사체인양 등) 인명구조 시 사용장비는 수시(귀대 후) 소독·멸균을 실시하고 근무일지 및 감염관리실 사용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51) 市 119재난대책과-1361(2020.01.23.)호 「2020년도 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시달(통보)」

24 선착대장 등 화재출동 초기 재난현장표준작전절차 준수 미흡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2021년 4월 13일부터 2022년 4월 12일(1년간) 기간 중 인명피해 1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 500만원 이상 화재출동 총 23건에 대하여 무전 녹취록(1,224개 파일) 및 긴급구조표준시스템 관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1, 102, 103, 200)에 따른 초기 무전 이행 실태를 10개 평가항목으로 구분, 각 항목별 실시와 미실시로 구분하여 실시한 경우 1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량화 한 결과 10점 만점 기준 평균점수는 4.26점(최고 8점, 최저 1점)이며 무전 이행률이 50% 이하로 분석됨에 따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1, 102, 103, 200)에 규정된 선착대장 등 화재출동 초기 무전 이행이 미흡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신속·효율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해 작성된 표준작전절차로서 소방대원의 현장활동과 안전관리에 있어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방침을 기술한 표준지침입니다.
-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0 ‘현장지휘절차’)에 따르면 선착대장은 현장 도착 즉시 최초 상황전파 및 지휘권 선언, 상황판단, 재난규모에 따라 대응 단계 발령(요청) 및 추가지원 요청, 상급지휘관이 현장에 도착하면 지휘권 이양절차(SOP 102)에 따라 지휘권 이양을 실시하여야 하며, 후착대 선탐자는 현장지휘관(지휘권 선언자)에게 현장도착 보고 후 임무지정을 받고 배치, 현장 대응을 하여야 하며, 또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200 ‘화재대응 공통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선착대는 육안으로 보이는 화재장소 주위의 상황을 전파하여야 하며,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103 ‘지휘활동기준 및 통합지휘절차’)에 따라 모든 지시는 수령자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음성(무선통신)으로 지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5 펌볼런스 구급자격자 배치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운영 중인 펌볼런스 10대의 탑승대원에 대한 구급자격 현황을 살펴본 바, 감사일 현재 기준(2022년 6월) 6개 센터 및 4개 지역대 25개 팀 중 8개 팀에서 구급자격자를 배치하지 않고 펌볼런스를 운영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편성·운영)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심정지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구급대의 구급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의 펌프차를 펌볼런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펌볼런스에 탑승하는 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구급 자격자⁵²⁾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펌볼런스 대원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구급대원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5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구급대원의 자격기준)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라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

26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공기충전기에 대한 정기점검결과 입력 사항과 용기 관리현황을 확인한 바 감사기간 중 공기충전기 주간점검 후 점검결과를 소방장비관리 시스템에 총 5회 입력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공기호흡기용기 33개에 대하여 공기 충전일이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배출 및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호흡보호 장비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그 점검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따라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2021-240호)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및 별표7(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공기충전기는 주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 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7 의용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참석기준 미달자 해임 미 실시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남성의용소방대 ㉠㉠㉠ 대원은 근속년수가 2년 이상인 대원으로서 전문교육을 연 12시간 이수하여야 하나 전문교육을 총 2시간 이수하여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해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교육 및 훈련)에 의하면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도 등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은 수난구조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연 12시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기본교육 18시간 이상,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8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부적정 사용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9년 5월 27일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를 1,000매(3매 1조) 제작하여 예방안전과 500매, 현장대응단 100매 및 안전센터 각 100매씩 배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적발 시 사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예방소방처리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벌칙규정(과태료를 포함한다)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하여 그 위반내용, 위반법령의 조문을 기록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만, 관계인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계인 참여하에 날인거부를 명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등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따라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각 법령별로 수차례 개정되어 과태료 금액 등이 상향됨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9 잠수장비 정밀점검 미 실시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보유 중인 잠수장비 관리현황을 살펴본 바 최근 3년 이내에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잠수장비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제1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제2021-240호)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7(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8.(정기검사 등)의 바목에 의하면 잠수장비는 매 3년 마다 1회 이상 제조사 또는 외부 전문 업체에 정밀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0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미준수

【지적내용】

☆☆소방서에서는 작성한 화재발생종합보고 현황을 확인한 바 조사기간 연장보고를 함에있어 화재조사결과보고 기한인 15일을 초과하여 연장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구조물 화재조사 결과보고를 하면서 해당 건축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의 작동여부와 관계인의 초기 소화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소방방화시설 활용조사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감정기관으로부터 증거물 감정결과를 메일로 전달받은 뒤 전자문서시스템에 비전자문서 등록을 하지 않고 처리하는 등 화재조사 및 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7조(조사결과보고)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화재조사의 진행 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긴급상황보고에 해당하는 화재의 경우 별지 제3호 내지 제3-12호 서식 중 해당 서식과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을 작성하여 화재인지로부터 30일(단,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에는 총 50일) 이내, 일반화재의 경우 화재 인지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보고 후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시 감정결과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 ❁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1 소방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119재난대응과에서는 피난·방화시설을 훼손, 장애 등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요양병원등 9개소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면서 적발부서인 예방안전과로 부터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후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서면으로 진행하지 않고 위반행위 당사자에게 유선연락하여 의견을 제출할것인지 구두로 문의하고 감경절차를 진행 및 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⁵³⁾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법무부,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836-14)에 따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정청은 질서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정식 부과에 앞서 사전 절차로서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필수 절차로서 생략될 수 없으며, 질서행위규제법이 정한 방법 외의 수단(예: 주차위반으로 인한 스티커 발부,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부분 발부 등)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비용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생략하거나 통합하여 고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3)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 ①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②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 ④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 ⑤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32 소방활동 자료조사 업무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감사기간 중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본 바, ■■산업기계 등 3개소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적게는 15일, 많게는 84일까지 지연하여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경계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자료조사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8조(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대상 및 횟수)에 따르면 소방기본법 제13조의 화재경계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연 1회 이상, 2,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공사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3 구급활동 중 활력징후 측정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 감사기간 중 병원 도착까지 이송 소요시간이 5분을 초과한 1,943건에 대하여 활력징후 측정을 최초 1회만 측정하는 등 구급활동 중 활력징후 측정 및 기록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구조구급의 기록관리)에 의하면 소방청장 등은 구조구급활동상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9조(구급활동상황의 기록유지)에 따라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에 구급활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II.구급대 운영지침 제10장(구급활동의 기록)에 따르면 환자평가-활력징후는 모든 환자에게 측정(비응급 환자일 경우에도 반드시 측정,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장 도착하여 최초 1회, 병원 도착 직전 마지막 1회(현장도착하여 최초 1회 측정 후부터 병원도착까지 이송 소요시간이 5분 이내일 경우 최초 1회만 측정)는 반드시 기록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4 퇴직자 개인안전장비 등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에서 감사 기간 중 퇴직 또는 공로연수 참가자 총 5명에 대한 개인보호장비 등의 회수 및 불용처리 업무와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의 현행화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운용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방장비운용자의 소방장비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는 불용심의회를 통해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의하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5 소방용수시설 1인 1담당제 추진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산하 5개 119안전센터에 대한 소방용수시설 1인 1담당제 추진 사항을 확인한 결과, 4개 119안전센터에서는 1인 1담당제를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19안전센터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부 2인 1조 조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등 소방활동 개인책임제 실현을 위한 1인 1담당제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워크 다이어트(Work Diet) 추진결과 알림」(소방행정과-8050호, 2018. 5. 17)에 따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소방용수시설조사는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8. 6. 1.부터 1인 1담당제로 운영하도록 시행된 바,
- ⦿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1항 및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0조(119안전센터장의 자세) 제1항 규정에 따라 지시사항에 대한 준수 및 성실한 이행하여야 합니다.

36 개인정보보호장비 기록 및 재고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개인정보보호장비 방화복 등 6종에 대하여 현황을 확인한 바 본부 배정 및 안전센터 배부 후 문서상 재고 수량과 실제 보유 재고 수량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장비 기록 및 재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⁵⁴⁾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⁵⁵⁾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⁵⁶⁾에 의하면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4)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①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재고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5)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장비(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安全靴), 방화두건)

56) 제26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의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37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고장 소방용수 시설)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119재난대응과)에서는 2018년 동절기 기간 중 고장 상태였던 ☆☆101호 등 13건(2018년 말 기준)의 고장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신속히 수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2019년 소방용수시설 연간 단가내역서」가 인천소방본부로부터 시달된 시점까지 고장 소방용수시설 수리 공사를 6개월 이상 지연하였다가, 그 이후 연간단가계약을 통하여 수리 공사를 실시하는 등 고장 소방용수 시설 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급수탑·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2019년 1월중 인천소방본부로부터 시달된 「2019년 소방용수시설 관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고장이 발생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심각한 경우는 최단 시일 내 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VI. 특정감사분야 감사 사례

1 화재안전정보조사 행정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는 정보조사 결과 양호대상에 대하여 첨부1 서식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관계인 지도사항 기재 및 점검결과 이상유무 기록 유지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정보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3호 및 첨부1서식의 부분을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2020년 화재안전정보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보조사 결과 지적된 소방 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시정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별표3호 (화재안전정보조사결과 관계인 의무사항 통지서) 서식과 첨부1(조사결과에 따른 조치할 사항)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정보조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조사 결과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치사항	처리방법
불 량	중대 위반사항 ⁵⁷⁾	조치명령 (입건, 과태료 포함)	정보조사결과서(별표3호 서식) 및 첨부1서식 부분 교부 및 조치명령 문서 기안 발송
	중대 위반사항 외 사항	자진개선명령	정보조사결과서(별표3호 서식) 및 첨부1서식 부분 교부 ※ 자진개선명령 미실시→행정처분(입건,과태료, 조치명령 등)
	소방분야 외 사항 (건축·전기·가스 등)	자진개선명령	정보조사결과서(별표3호 서식) 및 첨부1서식 부분교부 ※ 자진개선 미실시→기관통보 ※ 통보조건이 다수인 경우 주단위 통보 등 탄력적 운용
양호			정보조사결과서(별표3호 서식) 작성 부분 교부 ※ 지도사항 기재는 첨부1서식 활용

특
정
감
사

57) 중대한 위반사항

- ①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수신기 차단행위, 소방펌프 가동 불능상태 등을 포함한다.)
- ② 비상구 또는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여 즉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방화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순 공사로 원상복구가 곤란한 경우
- ④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 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관리 및 유예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2018년도 이후 각 소방서에서 처리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 접수·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나, ■■건물(◇구 도담로 ◎◎)는 유예종료일 이후 유예신청서 또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어 현장 확인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통보없이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건축물을 정상 사용하고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청(舊 국민안전처)에서는 2016. 4월 자체점검 실시와 관련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선 소방관서 담당자들의 업무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업무처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고자 폐업·폐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을 유예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⁵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 ❁ 자체점검 유예신청은 원칙적으로 자체점검의 법정 신고기간 이내⁵⁹⁾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1회 유예기간은 최장 1년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만료일 전까지 관계인이 재신청하거나 담당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건축물의 사용을 재개하는 경우 관계인은 7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8)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50(2016.4.2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시달」

5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게 함으로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8.13. 일부개정 / 2020.8.14. 시행)

3 소방건축민원 행정업무처리 개선 방안 마련

【지적내용】

2021년도 하반기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각 소방서 민원팀에서 생산을 완결한 기록물 보존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각 소방서 문서고의 기록물 보관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로 대부분의 소방서에서 공공기록물 보존을 부정적 하게 관리하고 각 소방서별 소방건축민원업무 처리시 징구서류와 결과회시 등의 행정업무처리 기준이 각기 상이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록물의 등록·분류·편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동법 시행령 제23조(편철 및 관리)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업무수행과정이 반영되도록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1개 이상의 기록물철을 만들어 해당 기록물을 편철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을 정하여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편철·관리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에 의하면 처리 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국내여비 지급업무 절차 부적정

【지적내용】

외근 근무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업무를 살펴본 바 ☆☆소방서 및 ◎◎소방서에서는 지방재정프로그램(e-호조)의 품의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외근 근무자의 국내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문서의 전자적 처리나 종이문서의 접수·처리절차를 따르지 않고 여비청구서를 전자메일 또는 문서수발로 전달 받아 그 사본을 지방재정프로그램에 첨부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하면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예산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결재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문서의 접수·처리)에 따르면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 문서인 경우에는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 현업부서 수당 지급 업무처리 소홀

【지적내용】

2021년 하반기 특정감사 기간(2020.1 ~ 2021.7) 중 119구조대 출동가산금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각 소방서에서는 신고취소 및 출동 중 상황종료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한 출동 등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출동 건에 대하여 출동수당 가산금을 과지급(306건, 1,110,000원) 하는 등 출동가산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동 규정 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및 소방공무원 출동가산금 운영기준⁶⁰⁾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및 가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산금의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동가산금 지급 기준>

1. 지급대상 : 인명구조·화재진화 또는 화재조사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2. 지급액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구조 또는 구급활동의 누적출동 횟수가 1일 3회를 초과하는 출동에 대하여 1회당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나. 화재 현장에서 화재진화 업무를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진화를 위한 출동일수마다 3,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비고) 가, 나,의 가산금은 각각의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총액은 한 사람당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화재, 구조·구급 신고취소 및 출동 중 상황종료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동횟수에 미포함

60) 소방공무원 출동가산금 운영기준 알림<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1024(2016.02.01.)호>

6 119구조대 장비관리 운영 부적정

【지적내용】

각 소방서 119구조대 내용연수 경과 구조장비를 확인한 바, 불용심의 요구 및 불용심의를 통한 연장사용을 결정하지 않고 구조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119구조대 소방용 특수보호복 관리 운영 실태1를 확인한바 관리 전담자를 미지정 운영하여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자연손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유수량에 적합한 별도의 보관대를 확보 거치 보관하여야 함에도 일부 특수보호복을 제외한 장비는 가방 상태로 장기간 보관 중에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등에 대하여 장비의 상태 등을 검토 후 불용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 또한 소방청 훈령「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의결을 통해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불용 및 연장사용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소방청 고시「소방용 특수보호복 등의 성능과 유지관리기준」 제7조(특수보호복의 유지관리 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특수보호복의 특성상 구김으로 인한 손상, 밀폐된 공간에 장기간 보관으로 인한 자연손상 및 고온으로 인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대를 제작·활용하여 거치 보관하여야 하고, 특수보호복을 구매하여 활용할 경우 제작사 또는 납품사로부터 착용·탈착 및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 받아 활용하여야 합니다.
- ❁ 또한 동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특수보호복을 담당하는 전담자를 119안전센터 또는 119구조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중 중앙소방학교·지방소방학교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 화생방사고 대처 요령 등 관련과목을 이수 한 사람을 전담자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7 인사기록카드 입력사항 누락 등 관리 소홀

【지적내용】

2017년 ~ 2020년 신규임용자 및 소방교 인사기록카드 작성·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학력 및 전력조회 등을 미입력 하는 등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등) 및 제10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에 의하면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⁶¹⁾을 작성·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 규칙 제12조(인사기록의 작성) 및 제17조(인사기록의 편철 등)에 의하면 신규채용된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초임보직 소방기관의 장이 작성하며,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1)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1조(인사기록의 종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서문, 신원조사회보서,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경력증명서, 전력조사회보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징계기록 말소 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내용】

2017년 이후 징계처분 기록말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교 ○○○ 등 8명에 대하여 말소 결재 및 말소 사실 통보 등을 실시하지 않고 기록말소를 하였으며, 소방장 ○○○ 등 11명에 대하여 징계처분 기록말소에 따른 호봉 재확정 미실시 및 승급 제한기간 중 호봉 승급, 호봉 재확정시 근무연수 오류, 호봉 재확정시 결재권자에 대한 보고 없이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만 반영하는 등 징계기록 말소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4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및 제14조의2(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에 의하면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기타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해야 하며,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호⁶²⁾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확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15조제2호⁶³⁾ 또는 제3호에 따라 승급제한 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을 재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2)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을 때

63)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 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9 공인 사전날인 사용 부적정

【지적내용】

각 소방서 공인 사전날인 사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증 및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공인 사전날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 폐기하지 않았으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등 공인 사전날인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에 의하면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의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사용명세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문서의 전자적 처리)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 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 소방공무원 복제착用に 따른 관리 소홀

【지적내용】

☆☆소방서 외근직원의 복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9구조대와
☆☆119안전센터 등에서는 2018년 11월경, 2019년 12월경 2회에 걸쳐 개인
사비를 들여 규정에 맞지 않는 점퍼류(폴리스 자켓)를 공동 구매하였고,
구매한 점퍼에 복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계급장 및 그 부속물 등을
임의로 부착 후 사무실 대기 및 현장 활동 중에 착용함으로써 시민의
시선으로 볼 때 소방복제로 오인 할 수 있는 혼란을 주고 있음,

【업무처리 시 착안사항】

- ⊙ 소방공무원법 제18조(복제) 제1항 및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2조(착용수칙)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고,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동 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근무장은 내근 등, 기동장은 외근이나 대기 근무 등, 특수장은 특수업무 수행 시에 착용하는 등 그 착용 구분에 맞도록 착용하여야 하며, 동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훈령 제104호) 제10조(그 밖의 제복의 제작 및 착용) 규정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은 받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 또한 동 세칙 제9조(제복의 착용점검) 제1항에서는 소방관서의 장이 제복을 지급받은 자가 규칙 및 세칙이 정한 규정에 적합한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